

#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 변동과 권력 재편

백준기(한신대 교수, 정치학)

## I. 머리말

이 글은 오늘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골격과 그 정치적 메커니즘 이 형성되는 한국전쟁 후 1950년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당시 북한의 상 층 정치(*high politics*) 행위자들 간에 당면한 현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경쟁 및 갈등 관계가 어떻게 형성 되고 분출하였는지, 그리고 왜 정치 갈등이 ‘파국적 조정’을 거쳐 현재의 비경쟁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소멸된 정치적 경쟁 세력들은 북한 정치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등을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는 북한의 역사에 있어서 체제 이행의 다양한 길이 열려 있던 가능성의 시대이자 정치적으로 가장 풍부했던 시기였다는 데 대부분의 연

구자들이 동의한다.<sup>1)</sup>

한국전쟁 후 북한의 1950년대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첫째, 권력 구조 측면에서 보면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세 차례(1953년, 1955년, 1956년)에 걸친 지배 엘리트 내의 권력 갈등을 통해 김일성 중심 세력 이외의 정치 지배 엘리트 세력이 중앙 및 지방 권력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으로써 그 후 현재까지 북한에서의 정치적 역학은 사라지게 되었다. 뒤이어 약 3만 명 이상이 체포되어 투옥 또는 사형에 처해진 1957~1959년의 전 사회적 차원의 대대적 숙청 작업은 상층 지도부 수준에서 시작된 정치 지형 재편이 사회적·토대적 수준에서 완결되어 단일 지도 체제의 전일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측면이다. 이 시기에 전 사회,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되어 현재의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이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의 두 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1959년에 이르면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수된다.

셋째, 이 시기에 자주 외교 노선의 토대가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UN에 ‘한국 문제’가 의제로 상정된 이후 국제 무대(사회주의권 포함)에 있어서 소련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휴전 체제 관리를 위해서는 소련의 역할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

1) 서동만,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과 이태을로기 상황”, 김성보,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논의와 귀결”,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 역사비평사, 1998)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1995) 등 참조

2) 1945~1948년의 남북한의 정치적 에너지가 융축하여 과국적으로 폭발한 결과물로서의 한국전쟁은 ‘한국전후정치’(post-korean war politics)라고 명명되는 현대 남북한 정치의 전환점이었으며, 정전 협정으로 표현되는 ‘1953년적 환경’을 조건으로 시작하여 1961년 사회주의적 개조 완수 선언까지의 시기는 북한에서의 ‘한국전후정치’ 전반을 규정하는 ‘북한 정치의 본원적 축적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으며, 이로 인해 대 자본주의 진영 외교뿐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소련의 대외 정책 지침이 북한의 외교 수행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56년 북한의 권력 투쟁에 개입한 소련의 결과적 실패와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로 인해 북한의 자주적 외교 노선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전 후 3개년 계획과 5개년 계획을 통한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및 사회주의적 개조 완수—현 시점에서 이 경제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에 힘입어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은 ‘경제적 우월성’을 토대로 한 통일 전략을 수립하고 남한에 대해 물자 지원 및 자유로운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상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1960년 4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남북 련방제’ 창설 제안은 북한의 통일 전략과 관련하여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안은 정전 후 북한이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의 형태가 아닌 비무력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제도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통일 분야에서의 이러한 시도들은 이후 북한의 통일에 대한 규범적 접근의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 1950년대 북한의 정치 변동과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측면 중 두번째 요소, 즉 사회경제적 요인이 여타 측면의 변동을 초래한 기본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1950년대 북한의 정치적 변동 정점에 ‘8월 전원회의 사건’<sup>3)</sup>으로 대변되는 1956년의

3)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소위 ‘8월 종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사회주의 진영의 권력 투쟁 사건에 대한 소련식 평가 기준에 따라 종파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종파 사건’이라는 명칭은 권력 투쟁의 승리자에 의해 사후에 내려진 정치 평가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객관성이 미흡하다. 둘째, 소련에서도 이미 폐레스트로이카 시기에 기존의 종파 사건 및 반당 분자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복권 및 명예 회복되었다.셋째, ‘8월 사건’은 북한 정치 지형상의 ‘분파’(fraction)의 존재가 초래한

정치적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40여 년간 북한의 정치 체제를 규정할 1950년대의 북한의 정치 변동에 대한 쟁점 및 제 입장을 분석하고 정치 변동의 정점으로서 1956년의 정치적 위기의 원인을 전후 경제 복구와 발전 전략 수립 및 적용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1956년의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는 상층 정치 차원의 권력 핵심부의 권력 갈등이 이후 국가 기구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 전화되어 북한 정치 지도 체제의 권력 지도가 재편되는 과정을 소위 '최창의 반당음모 사건 및 간첩 사건'과 '제3당 사건'을 통해 조명해 보기로 한다.

## II. 정치경제적 위기와 '8월 전원회의 사건'

### 1. '파벌'(faction), '분파'(fraction), 그리고 '당내 경쟁'

'일원주의 체계'(a system of unitarianism)로서의 일당제(one party system)에 있어서 당내 권력 갈등에 대한 분석은 정당 체계(party system)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당내 경쟁'(intra-party competition)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좀더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에 앞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먼저, 일반적으로 정당 '체

---

당연한 귀결점이라기보다 당시 북한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정치적 표출물이었으며, '정치적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데 익숙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 과정의 한 부분이자 일반적인 정치 갈등의 한 형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기존의 명칭을 1956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고 수정하여 부르기로 한다.

계’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복수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에서의 경쟁은 당내 경쟁뿐 아니라 ‘정당간 경쟁’(inter-party competition)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당제하에서의 ‘경쟁’은 정당 체계에서의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당내 경쟁만을 뜻하는 제한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원주의적 정당 제도와 비교할 때, 일당제에서의 당내 경쟁은 당내 권력 보유자들이 ‘직접’ 대면하는 투쟁의 형태를 띠게 된다. G. 사르토리의 지적대로 일당제하의 당내 경쟁은 선거에서의 경쟁과 정통성 경쟁을 거치지 않는 상층 정치 지도자들 간의 ‘대면 투쟁’—그것이 당 중앙 위원나 정치국 등의 제도적 기구를 통한 ‘실각’이든 일방적인 ‘숙청’을 통한 것이든—으로 표현되며,<sup>4)</sup> 그로 인해 ‘경쟁’은 종종 직간접적인 물리적 강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일 정당 체계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당내 경쟁이 그 결과가 당의 유지를 위해 부정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과는 별개로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시기, 국면, 상황 변화에 따라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단일 정당 체계의 경우 정당간의 경쟁이 부재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은 당내뿐이고 단일 정당만이 영원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므로 유일하게 남는 문제는 ‘누가 다스릴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공산)당이 다스린다'고 답한다면 '당이 당을 다스리는' 둇어 반복일 뿐이다. 따라서 일당제하에서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당내 갈등이나 권력 투쟁을 비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나 정치 행태로 규정짓는 가치 개입적 평가에서 벗어나 일당제하에서의 정치 과정의 한 부분

4) 사르토리는 (다원주의적) 정당 체계와 단일 정당 체계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내 경쟁’은 정당 체계에서의 경쟁의 한 부분일 뿐이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당간의 경쟁’이며, 이로 인해 정당 다원주의의 본질은 정당 지도자들 간의 대결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의식한 선거에서의 경쟁이 무의미하고 경쟁적 정당이 부재한 체계상의 특성으로 인해 정치 지도자 간의 경쟁은 ‘직접’ 대면하는 투쟁 형식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G. 사르토리, 어수영 역, 『현대정당론』(서울 : 동녘, 1986), 77~79쪽 참조.

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당제하에서의 당내 경쟁이나 당내 권력 갈등에 대한 가치 개입적 평가가 범할 수 있는 우는 다원주의 입장에서건 일원주의의 입장에서건 경쟁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항상 ‘적과 악’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일당제하에서의 ‘경쟁 패배자’를 ‘다원주의의 수호자’ 또는 ‘회생자’로 평가하고 싶은 ‘학문 외적 유혹’에 종종 빠지게 되며, 일당주의 관점에서는 당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를 꾀한 ‘반당 종파 분자’ 또는 ‘제국주의의 스파이’로 낙인을 찍어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화한다. 물론,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다. 폭력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극단적인 형태의 권력 투쟁—예를 들어, 1936~1938년의 스탈린의 대숙청—이 정상적인 당내 경쟁이나 권력 갈등—예를 들어, 흐루시초프 시기의 당내 제도를 활용한 권력 투쟁, 또는 1955~1956년의 북한의 당내 갈등—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후자가 전자로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지만—1955년부터 1959년까지 북한의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양자간의 필연적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당제하에서 ‘대면 투쟁’의 양상을 띠는 북한의 당내 권력 갈등을 ‘당내 경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유용한 분석 단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의 하부 단위에 대한 개념 설정이 요구된다.<sup>5)</sup>

이 글에서는 북한 로동당의 하위 단위로서 최소한의 지역, 지방 단위인 ‘당 세포’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의 단위, 즉 당의 상층 공간, 상층 정치 영역에 존재하는 하위 단위를 설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을 비롯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반화된—물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5) 단일 정당 체계에서의 당내 권력 갈등을 해당 체제의 국가 지도부 내의 권력 갈등으로 등치시킬 수 있는 근거는, 이러한 체제에서는 비록 모든 국민이 당원은 아닐지라도 당과 국가가 하나의 전체로서 인정되는 ‘정당 국가 체계’(party-state system)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개념이긴 하지만—단위 개념인 ‘종파’라는 용어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나 ‘종파’라는 용어를 분석 단위로 활용할 경우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종파’(CEKTA/CEKTANCTBO)나 ‘파벌’(faction)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정당’이란 개념보다 오래된 ‘파벌’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볼테르식 표현에 의하면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흔에 따르면 ‘정부를 전복시키고 법률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도 ‘파벌’이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의 내적인 구성 요소로서 현실적으로 간주되고 있고—제3세계와 선진국의 경우가 ‘파벌’이 가능하는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파벌이라는 용어가 다른 개념이나 구성 요소로 대체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용어는 여전히 현실적 힘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벌’이라는 용어가 당내 갈등이나 경쟁을 분석하는 객관적인 분석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치 평가적 의미’를 탈각 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파’나 ‘파벌’이라는 가치 평가적 개념보다는 서구 정당 체계 분석에서 사용되는 ‘분파’(fraction)라는, ‘파벌’이나 ‘종파’보다 좀더 중립적이고 가치 구속적이지 않은 용어를 분석 도구로 선택하고자 한다.<sup>6)</sup>

단일 정당 체계에서의 당내 권력 갈등을 당내 경쟁이라는 정상적인 정치 과정의 차원으로 인정한다면 ‘분파’는 당내 구조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인정될 수 있다. 북한의 공식 문건에서 표현되고 있는 ‘종파’라는 용

6) G. 사르토리는 ‘파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문제 제기를 한다. 먼저, 파벌이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확실한 체험을 근거로 깊이 뿌리내린 가치 평가적인 의미를 지닌 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파벌이라는 용어는 사용자들 간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개념상의 엄밀성이 부족하며, 마치 근대성의 확립이 당위적으로 파벌의 폐기와 동일시되는 역사적 합축성의 제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세한 내용은 G. 사르토리, 어수영 역, 『현대정당론』, 110~113쪽 참조.

어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가치 평가적인 용어이자 ‘경쟁 승리자의 용어’이다. 1956년 8월에 발생한 북한 로동당 내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는 다른 말인 “8월 ‘종파’ 사건”과 필자가 사용하는 “8월 ‘전원회’의 사건” 간의 차이는 용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가 가치 평가적인 용어라면 후자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 2.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권력 갈등의 내연

정전 후 1950년대의 권력 갈등의 원인과 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쟁적인 가정<sup>7)</sup>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전후 경제 복구 건설 노선 수립을 둘러싼 대내외적 논쟁과 대립이 북한 지도부의 권력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가정이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전후 경제 복구 발전 계획 수립과 실행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정책 실행의 결과물은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이 가정의 성립 여부와 이 글이 의도하는 바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전 직후인 1953년 8월, 소련 정부는 전후 북한 경제의 복구 건설을 위해 북한정부에 10억 르블을 무상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김일성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 당·정 대표단이 소련의 원조와 전후 경제 복구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양국 지도부는 북한의 전후 복구 건설 방향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북한 지도부는 소련 지도부로부터 ‘계획’의 골격 및 지침을 전달받았다.

7) 이에 대해 필자는 안드레이 란코프의 ‘패권투쟁론’, 이정식과 스칼라피노의 ‘공산주의 조선화론’, 남근우 등의 ‘경제건설노선 대립론’으로 분류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 역사비평사, 1998) 참조.

이 계획 초안을 토대로 하여 당시 북한의 정부 각 부처에 파견되었던 소련 경제 고문과 전문가들에 의해 경제 복구 발전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전후 복구 건설 노선 수립을 둘러싼 북한 지도부 내의 대립’이라는 가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소련 지도부와 북한에 파견된 소련 경제 고문과 전문가들은 전후 복구 건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공업 부문의 복구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이러한 소련측 플랜은 소련을 필두로 한 중국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 계획 실행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각 산업 부문별, 단위 공장별, 도시별로 해당 국가에 복구 건설 과제를 할당하고 원자재, 설비는 물론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담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인 시기별 일정 계획에 의해 진행되었다.

소련의 원조는 중공업, 경공업을 망라한 대규모 산업 단지 및 산업 시설의 복구 건설에 주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는 수풍 발전소, 청진 금속 공장, 김책 제철소, 남포의 유색 비철금속 제련소, 자동차·트랙터 공장, 홍남 질소 비료 공장, 평양 대단위 섬유 단지를 포함한 섬유 산업 기업, 방직 공장 등 ‘인민 경제의 전반적 복구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본 공업 시설’이 망라되어 있었다. 또한 1953~1954년에만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해 약 1억 2,000만 달러 상당의 공작 기계, 전기 발전 설비, 도로 건설 장비, 철강재, 전선, 제어 계측기 등 각종 원자재 및 기계, 설비들이 제공되었다. 이들 국가의 무상 원조가 1954년 북한 총예산의 31.6%를 차지했다는 사실로부터 이 원조 계획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따라서 당시에 북한 지도부가 산업 부문간의 발전 ‘우선 순위’의 선택 측면에서 재량권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경제 복구 건설 수립 단계에서부터 당내 분파간의 갈등이나 소련측의 플랜과 불일치 또는 대립되

8) ABTP(러시아연방 외무성 대외정책 문서), ֆ(폰드).0102, օ.10.(오피스)10, թ(빠쁘까).53, 데 (첼로).22, pp. 33~36.

는 점이 존재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953년 6차 전원회의 결정 수행과 1954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1953년 1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은 “현 단계에 있어 당의 기본 과제는 전쟁으로 붕괴된 인민 경제의 조속한 복구와 공업화의 토대 건설, 그리고 인민의 물질 생활의 조속한 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소련의 5차 5개년 계획이 지향했던 과제들과 동일한 정책들이 북한 지도부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인민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상품 가격 인하와 소비재 생산 증대 조치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1953년 한 해 동안에만 세 차례에 걸친 상품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최소 20%에서 최대 65%에 이르기까지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인민들의 실질적 상품 구매력이 향상되었고 실질 임금 소득의 일정한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1954년 인민 경제 계획에는 물질·문화 수준의 지속적 제고의 기조하에 품목에 따라 10%에서 100% 이상에 이르는 소비재 생산 증대 과제가 포함되었다.<sup>9)</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 북한 지도부 내의 권력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전후 경제 복구 건설 노선 수립을 둘러싼 내부의 이론적 대립이나 ‘외적인 환경’에 의한 북한 지도부의 대립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갈등’은 어디에서 그 직접적 계기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론’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발견된다. 즉 ‘계획’의 ‘수립’ 과정이 아니라 ‘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의 상승 작용 결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위기가 야기되었고, 이 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 내의 권력 갈등이 표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9) АВПРФ, ф.0102, оп.10, п.57, д.49, pp. 292~298.

따라서 애초부터 패권(supremacy)을 위한 능동적인 진군이었다기보다는,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과정에서 성과를 알리는 외형적인 통계 지수와는 무관하게 일련의 정책적 오류가 발생하여 이것이 정책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과 그 내부 그룹이 기존의 우월적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상황적 대처가 김일성과 내부 그룹의 정치적 존폐를 결정하는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비화되어 이후 ‘최창의 반당 간첩 음모 사건’ 및 ‘제3당 사건’으로 확대, 전화되는 패권 장악 추진(drive for supremacy)으로 발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후 경제 복구와 건설 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계획을 집행할 엘리트의 선발과 충원, 그리고 당·정 간부의 자질과 역량에 관한 문제였다. 즉 중앙 각 부처와 기관에서 지방 하부 단위 기관에 이르기까지 집행의 주체인 관료들의 경험과 능력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 상업, 경공업, 중공업 관련 부처 등 전후 복구 건설의 수행과 인민의 물질 생활 개선 추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지닌 국가 기관들의 경험 부재로 인해 복구 건설 사업이 예정된 기간 내에 완수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구 건설 사업의 질과 수준도 매우 낮은 형편이었다.<sup>10)</sup>

지방 하부 단위 기관에서의 간부 문제 또한 심각하였다. 군당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위원장들의 ‘준비된 정도’는 더욱 취약하였다. 경제 복구 건설 계획의 최종 집행 단위이자 계획 집행상에서 인민과 직접적인 대면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생산 문제’에 관하여 지방 하부 단위의 기업소 책임자들에게 중앙의 계획을 해명하고 관철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당

10) 예를 들어 흑색금속성의 경우 장관인 박의원은 북한 주재 소련 대사와의 면담에서 그 자신이 해당 분야에 문외한이며, 동 부처 내에서 준비되고 경험 있는 관료들의 부재로 인해 소련의 경제 고문과 전문가들의 지원 없이는 계획의 입안조차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실제로 1954년 계획의 경우 실행 과정에서 원료의 낭비가 많았는데, 이 낭비가 생산물의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실정이었으며, 회계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원가 계산을 포함한 정산 일반조차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교육된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생산 현장으로부터 지방 당 기관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sup>11)</sup>

또 다른 문제는 국가 기구·기관의 잦은 개편 및 폐지로 인한 정책 수행상의 비일관성과 단절성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당·정부 행정 조직의 잦은 개폐는 해당 기관들이 정치경제적 당면 과제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었고, 국가 경제의 개별 부문에 대한 지도·통제 체계의 복잡화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1954년 3월 공공 사업을 관掌하는 부처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건설위원회로 이관되었는데, 이듬해 1월 이 조직이 다시 복원되었다. 또한 1953년 폐지되었던 건설성이 1954년 다시 복원되었고, 이와 동시에 업무 기능이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국가건설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관료들의 사업 작품 및 근무 기강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가 경제 기관에 무절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관료들에 대한 전문 교육은 임시 방편적이고 위계적인 관료적 지시로 대체되었다. 정부가 수립되어 국가 기구가 채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잇따른 전쟁의 여파를 감안할 때 국가 기구 간부의 경험이나 준비된 정도의 취약성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이들의 역량 정도가 정책의 성공적 수행의 중요한 관건임에 동의한다면 이들의 역량과 자질상의 취약성이 북한 지도부가 수립한 전후 국가 발전 전략 수행에 심대한 차질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이와 더불어 국가 기구의 집행 역량과 이에 의한 결과를 타산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라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의 위치에 있는 정치 지도부는 현실적 조건과 준비된 정도를 고려하지 않

11) АВПРФ, ф.0102, оп.10, п.52, д.8, pp.74~75, 99~100. 왜냐하면 물질적 동기부여가 취약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산 현장에서의 전문 인력의 월급은 약 3,000원이었는데 비해 군당 위원장은 1,200~1,400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이동을 거부하였고, 또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직무 수행상에서의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은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집행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불가예측성이나 정책 수행 환경의 가변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정책의 수행 결과 정책 실행의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피해를 상정한다면 정책적 오류나 정책 실패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정책적 오류에 대한 책임 문제는 당내 권력 갈등을 통해 숙청이라는 소위 속죄양적 해결 방식이 종종 채택되었으며, 북한 지도부 내의 전후 1950년대의 권력 갈등 양태 또한 이와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기구와 관료들의 취약성으로 인해 재정 운영상의 원칙과 규율의 해이, 회계 감사 기능의 약화, 그리고 사회·경제에 대한 국가 부문의 통제력 상실은 자연스런 귀결이었으며, 이로 인해 당·정 고위 간부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재산의 착복 및 낭비, 수뢰, 직무상 배임 등이 만연하였다.<sup>12)</sup>

1955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전 국영 및 협동조합 부문 재산의 약 3분의 1이 착복되거나 낭비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 기관들의 사업 실태와 재정 운영 규율 감독 및 통제 기능이 내각 산하 인민통제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었으나 동 위원회는 활동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으며, 당 중앙이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결과 국가의

12) 예를 들어 소비조합에서 1953년 상반기 동안의 낭비, 착복 액수는 약 2억 3,000만 원에 달하였는데, 같은 기간 내 소비조합의 총수익이 약 4억 3,000만 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 중앙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금 유용, 관물 착복 등으로 1953년 6월부터 1954년 6월까지 1년 동안에 당원 중 2만 2,000명이 적발되었다. 당·정 고위 간부들은 국가 재산의 착복, 배임, 수뢰 등을 북한 현실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하고 타협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체신상 박일우는 착복 액수가 경미하고 자신의 범법 사실을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지 말고 손실분을 배상하도록 하는 서면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전 재정상 최창익의 경우 조세 정책의 왜곡과 수뢰 묵인에 대한 책임으로 2차례에 걸쳐 장관직에서 철직당했으나 당적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수상에 임명된 것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통제가 부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sup>13)</sup>

이렇듯 국가 기구가 취약한 상황하에서 1955년에 들어서면서 화폐가 증발되고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양등되고 실질적 구매력이 감소하는 등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었다.<sup>14)</sup>

전후 경제 복구 발전 계획의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는 농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농업 협동화 수행 과정에서 많은 결점들이 드러났는데, 협동화 수행에 필요한 간부 교육이나 필요 불급한 물질적·재정적 지원 조치 없이 협동화 속도를 강화하고 자발성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협동조합을 수적으로 증대시킨 결과(1954년 한 해 동안 1만 개소 이상의 농업 생산협동조합이 조직됨)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5~6가구로 구성된 명목뿐인 협동조합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빈농들을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에 가입시킴으로써 30가구당 농경용 가축이 3~4두에 불과한 협동조합이 대다수 건설됨으로 인해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sup>15)</sup> 또한 조합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빈농의 30% 이상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으며 종자나 비료, 농기구뿐만 아니라 양곡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의 행상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6)</sup>

농업 부문에서의 위기는 현물세 징수와 양곡 구매 사업 수행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1954년은 해방 이래 북한에서 최대의 흉작을 기록한 해였는데(1954년 기준으로), 이로 인해 1954~1955년에 양곡 구매 및 현물세 징수 사업을 완수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 사업은 특히 전후

13) АВПРФ, ф.0102, оп.11, п.65, д.45, pp. 187~190.

14)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7, pp. 182~183.

15) 당시 농업 부문에서 단순 농기구와 축력 부족이 심각하였다. 농가 전체의 3분의 2 가량이 농경용 가축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농업 부문 전체의 총 트랙터 수는 800여 대에 불과했다.

16) АВПРФ, ф.0102, оп.11, п.65, д.45, pp. 178~180.

경제 복구 및 3개년 발전 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생산 건설 담당자들인 노동자와 도시 근로자들에 대한 급양을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실패가 경제 복구 및 발전 계획 수행에 결코 가볍지 않은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

전후 경제 복구 및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강행하기 위해서는 생산 노동자와 도시 근로자에 대한 급양 문제 해결이 사활적인 과제였다. 이에 따라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작물 수확량에도 불구하고 농업 현물세가 추수 이전에 예상된 수확량에 따라 책정된 징수 비율이 그대로 강제 적용됨으로써 법적으로 25~27%인 현물세가 실제적으로는 30~32%를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은 과중한 현물세 징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도시 지역과 농촌 간의 긴장이 유발될 상황이었다. 양곡 수매 사업이 부진하자 내각은 1954년 10월 내각령을 발표하여 쌀의 자유 거래를 완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농가당 잠재적으로 국가에 대한 양곡 판매 기준을 부과하여 이를 감시 감독할 중앙당 및 정부 간부들을 도·군 단위에까지 파견하였다. 양곡 자유 거래 금지 조치에 의해 특용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나 도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급양을 위해 필요한 양의 양곡을 구매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제 복구와 건설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생산 및 건설 노동자와 도시 근로자들에 대한 원활한 식량 공급이라는 원래의 목표조차 불확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의 정책 실패로 귀결되어 도시 근로자 및 농민을 포함한 인민 전체의 불만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sup>17)</sup>

특히 1954년 현물세 징수시에 농민과 지방 단위 하급 간부들에 대한 사업 완수 압박과 심각한 편향이 존재하였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할당된 실

---

17)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6, pp. 10~13.

적 완수를 위해 농민들에 대한 구타, 체포, 강제 추방, 이주 등 강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강압적인 현물세 징수와 양곡 수매 결과 당시 농민의 5%만이 여유 양곡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95%의 농민에게서는 생계에 필요한 양곡조차 거의 모두 징수된 상태였다. 또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을 완수하지 못해 무능력자로 낙인찍혀 당적이 박탈된 말단 간부들이 자살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약 300여 명)하였고, 수만 명의 농민들이 아사하였다.<sup>18)</sup> 게다가 농민들 수중에 양곡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획일적 기준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빈농에서 중농에 이르기까지 의무 부과 방식으로 마지막 양곡까지 징수하였으며, 양곡이 남아 있던 부농 조차 여유 양곡을 자유롭게 내다 팔 가능성이 봉쇄됨으로써 불만이 농민의 전 계층으로 확산, 고조되었다.<sup>19)</sup>

이에 대해 당시 김일성이 위의 사업 수행상의 오류 및 편향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당시 농촌 지역에서 양곡 수매 사업 수행에 대한 농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조직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농민 수중에 양곡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당초 계획된 목표량 달성을 위해 양곡 수매 사업을 더 이상 강행하였더라면 당과 정부는 완전한 ‘정치적 패배’의 길로 들어섰을 것이라고 평가한 사실은<sup>20)</sup> 당시 북한 지도부가 전후 경제 복구와 건설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래한 정책적 오류의 심각성을 응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 내의 정책적 오류와 실패에 대한 심각한 상황 인식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급기야 이를 둘러싼 지도부 내의 갈등이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갈등의 표출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서 중국과 특히 소련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

18)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д.4, p. 46.

19)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6, pp. 2~3.

20)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8, p. 171.

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권력 갈등의 시작과 중·소의 영향력

1954~1955년의 정책 실패로 인해 초래된 북한의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그에 따른 지도부 내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1955년 후반기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 간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지도부 내의 갈등 등 당시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양국간에는 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당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김일성 내부 그룹은 대대적인 숙청이나 패권적 지위 획득 등의 파국적이고 무리한 해결 방식을 동원할 수 없었으며, 소련과 중국의 정치적 견제를 무시한 채 내부적으로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 전술의 경우의 수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따라서 1955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당내 갈등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의 김일성과 그 내부 그룹의 정치적 자율성은 ‘중·소 한계선’(sino-soviet boundary)에 의해 결정될 운명이었다.

한국전쟁 수행 과정에서 소련의 지원에 대한 중국측의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당 대회 이전까지 중·소간의 협력은 일반적으로 진전된 관계 유지로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1950년대 중국의 대 소련 정책은 ‘향소 일변도’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2년 8~9월에 걸친 저우언라이의 모스크바 방문시 양국은 19세기 아래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해 관심 사항인 소련의 뛰순 해군 기지 사용 허가에 합의하였으며, 스탈린 사후 1954년 9월에 개최된 중국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시에는 소련 공산당 제1서기 흐루시초프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소련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약 5억 2,000만 루블에 달하는 신규 차관이 제공되는

동시에 5개년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양국간에 체결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에는 중국 공업 건설의 44%가 소련으로부터의 기계 도입과 기술 도입에 연관한 것이었다. 특히 제1차 5개년 계획(1953~1957)의 기본 전제인 ‘과도기 총노선’의 핵심인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 전략은 소련 모델에 대한 충실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의 경제 계획 완수에 있어서 소련에 대한 의존도 및 양국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sup>21)</sup>

한국전쟁 이후 소련은 북한에 막대한 물질적·재정적 원조 및 기술 지원을 공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파견한 경제 고문 및 전문가들을 통한 경제 계획에 관한 조언들을 제외하고 북한의 내부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경제 복구 및 건설 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해당 집행부 처별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으로부터 파견된 경제 전문가들은 내정 간섭의 오해 여지로 인해 이에 대한 어떠한 통제나 조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5년 초 북한 국내 정세의 불안정, 특히 경제 분야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북한의 내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하였다. 1954~1955년에 북한이 처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소련의 당·정·지도부는 경제 복구 발전 계획 수행에 있어서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당면한 북한 정세와 관련하여 소련측의 판단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에 설정된 자본재 생산 부문의 성장 속도를 높추는 동시에 소비재 생산 부문을 평균적으로 높이는 문제와 농업 발전에 있어서 농업 협동화의 지속적인 강행을 자제하고 기존에 건설된 농업생산 협동조합을 심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문제, 물질 생활 개선에 관련된 문제

21) 이재선, 『중화인민공화국』(서울 : 학민사, 1988), 54~56쪽.

(소비재 생산 증대, 생필품 가격 인하, 주택 건설 등)들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민의 물질 생활 수준의 개선 문제는 분단이라는 조건하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므로 인민들의 물질 생활 수준 향상에 북한 지도부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남한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으며, 당과 정부 내에서 집단 지도와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1955년 1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러한 판단하에 몰로토프와 수슬로프의 발의로 1955년 4~5월로 예정된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로동당 지도부의 모스크바 방문을 2월로 앞당겨 긴급히 비공식 초청하여 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들과 토론할 것과 이러한 입장을 중국측에 알릴 것을 결정하였다.

당 중앙위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베이징 주재 소련 대사는 저우언라이를 접견하여 북한 내부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입장과 위에서 언급한 모스크바에서의 소련 지도부와 북한 지도부 간의 회합에 중국 지도부가 어떤 형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 측 의사를 타진하였다.<sup>22)</sup> 이것은 당시 북한 내정에 대한 중·소간의 협조 체제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sup>23)</sup>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은 소련 당·정 지도부로부터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지적과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권고받았다. 즉 양국 판매 금지 조치를 취소할 것과 국유화를 강행하던 상공업 분야 정책을 수

22)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8, pp. 1~4.

23) 물론, 당시 북한 정세에 대해 모든 면에서 중국이 소련측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 집단화의 규모나 속도에 있어서도 1955년 초에 중국 지도부 내에서 ‘모진(冒進)’에 대한 지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농업 집단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소련의 평가와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북한의 내부 정세에 대해—60년대 이래로 중·소 이념 분쟁 시기와 같은—비교적 양국간의 공조 관계가 원활했다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하여 사기업을 폭넓게 허용할 것, 농업 부문의 위기를 초래한 기존의 농업 현물세 징수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농업세 체계를 마련할 것, 기존의 5개년 계획안을 변경할 것, 그리고 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신강령 개정 작업을 중단할 것 등이 소련 당·정 지도부에 의해 지적된 사항이었다.<sup>24)</sup>

귀국 후 6월에 소집된 당 중앙위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행한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결산 보고에서 김일성은 소련공산당 중앙위로부터 받은 충고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자체 없이 이를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농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는 전망 없는 공장들의 건설을 취소하고 그 재원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5개년 계획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는 소련 지도부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인민 경제 5개년 계획안이 비현실적인 판단하에 입안된 것임을 인정하였다.<sup>25)</sup> 이 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농업 부문에서의 어려움을 과소 평가하고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 없이 농업 집단화를 강행하는 부적절한 정책을 집행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농업 집단화 강행을 중단하고, 개별적으로 협동화를 원할 경우 축력 등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춘 경우에만 허락할 것을 지시하였다.<sup>26)</sup>

농업세와 관련해서는 1955년에 발효된 농업 현물세의 인하 조치가 불가피함이 지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1956년에는 농업세 징수 체계를 변경,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반강제적인 국가 양곡 수매 사업 방식에서 탈피, 자발성에 기초하여 양곡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부족한 생필품과의 교환으로 협동조합 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으며, 이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양곡 매매 금지

24)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9, pp. 67~68.

25) 위의 문서, pp. 91~92.

26)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8, pp. 95~96.

조치도 모스크바의 판단에 따라, 당 중앙과 정부의 심각한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곡의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었다.<sup>27)</sup>

개인 상공업의 국유화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했다. 상무위원회 6월 회의에서 김일성은 소규모 개인 상공인들에 대한 배제와 제한 조치를 통한 국유화 강행의 오류를 인정하고, 특히 인민들의 생필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개인 자본의 투자를 장려할 것과 이들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고려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농업 분야 발전의 물질적 기반 확보와 관련하여 상무위원회는 약 27억 3,000만 원을 농업 부문에 추가로 배정할 것을 결정하였다.<sup>28)</sup>

모스크바로부터의 충고에 따른 당 중앙의 이러한 정책 수정과 제반 조치는 중앙을 비롯하여 각 지방 하부 단위 기관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수정으로 인해 이미 수립된 인민 경제 5개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북한 지도부의 내재적 균열은 이로써 봉합된 것인가. 당·정 지도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이 인민들의 피부에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지도부가 원했던 것처럼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지는 않았다.

1955년은 해방 10주년이 되는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중국과 소련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을 8·15 행사에 초청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후 경제 복구와 건설에 대한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동원과 배분, 통제 등에 있어서 정책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계획 달성을 차질을 초래하여 외부적으로 보여줄 만한 성과가 없었던 북한 지도부의 고민을 반증하는 것으로<sup>29)</sup> 동년 가을에 예정되었던 3차 당 대회도 연

27) АВПРФ, ф.0102, оп.11, л.60, д.9, п. 98.

28) АВПРФ, ф.0102, оп.11, л.60, д.9, pp. 105~108.

29) АВПРФ, ф.0102, оп.11, л.60, д.7, pp. 45~46.

기되는 등 상황은 그만큼 어려웠다.

대내적으로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의 고조와 대외적으로 이에 대한 소련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직면한 1955년의 상황은 북한 지도부에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였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과 내부 그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정치적 선택에 대한 중압이나 압박감이 여타 정치 분파에 비해 한층 더 높은 것이었다. 김일성의 정치적 선택은 ‘책임론’을 통한 정국 돌파와 이를 통한 각 분파 내에서의 기준의 안정적인 지위 확인이었다. 김일성은 사회경제적 위기의 책임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지도부 내의 오류로 돌리면서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계획’을 집행해 나갔다.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 문제와 더불어 모스크바 방문의 ‘후과’ 또한 지도부 내의 정치적 압박과 함께 그를 정치적 해결의 길로 추동한 중요한 계기였다. 즉 모스크바로부터의 ‘소환성’ 비공식 초청에 응했을 뿐 아니라 동행했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모스크바 지도부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상처 입은 자신의 권위를 회복할 필요 또한 김일성이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정치 영역에서 발견하게 된 중요한 동기였던 것이다.

#### 4. 권력 갈등의 분출과 '8월 전원회의 사건'

정전 후(박현영 사건 이후) 당내에 존재한 4개 분파(소련 국적 조선인, 옌안 출신, 남로당 계열, 국내 토착 공산주의자)는 노선이나 이념적 스펙트럼상에 좌우로 정렬 배치되는 차별성을 지닌 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기보다는 ‘출신’이 지니는 공통된 정서나 경험, 또는 당내의 주변적 이해 관계를 토대로 한 비교적 정치적으로 느슨한 결합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분파나 그 분파의 지도자는 패권적(hegemonic)이거나 지배적(dominant)이지 못하였다. 이것은 1952년 12월 남로당 계열에 대한 공격시,

나머지 3개 분파가—특히 소련계의 역할이 두드러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연합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직 김일성만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을 뿐이다. 이 분파들은 정당의 하위 단위의 스펙트럼상의 양극에 위치한 순수한 ‘파벌’(특정적인 권력 집단)과 순수한 ‘경향’(tendency)<sup>30)</sup> 사이의 중간 정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초기에 경쟁하던 대상이나 목표도 패권적 지위(supremacy)나 권력 정점이 아닌 직위 배분 등의 하위 권력 자원 배분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김일성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 경쟁 목표가 하위 권력 자원 배분에서 우월적 권력 획득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열려 있었고, 이에 따라 분파에서 파벌이라는 견고한 결합체로 발전할 개연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각 분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가용 자원의 크기에 의해 미래 시점에 결정될 것이었다.

정전 직후 4개 분파들 간의 알력을 주로 당 중앙과 내각, 그리고 지방 당 인민위원회 등에서의 직위 배분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 특히 김일성 내부 그룹을 비롯한 국내파들은 상대적으로 소련계가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54년 1월의 인사 이동을 통해 소련계와 국내파 및 옌안 출신 간의 직위 배분을 조정함으로써 각 분파간의 세력 관계를 조정하였다. 이 인사 이동은 북한당·정 지도부 내의 각기 다른 분파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지도부 내에서는 이것이 각 분파간의 직위 배분에 일정한 균형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듯 1955년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어 당

30) R. 로즈는 파벌과 ‘경향’을 구분하고 있다. 파벌은 의식적으로 조직된 웅집성과 규율을 갖춘 조직체인 반면에, ‘경향’은 ‘안정된 정치가 집단’이라기보다는 ‘안정된 태도의 집단’(a stable set of attitude)이다. Richard Rose, “Parties, Factions and Tendencies in Britain”, PS Feb. 1964, p. 37. G. 사르토리, 어수영 역, 『현대정당론』, 113~114쪽에서 재인용.

내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까지 김일성은 각 분파들 간의 하위 권력 자원 분배를 둘러싼 알력과 견제를 비교적 적절히 조정해 내고 있었고, 분파들 또한 서로간의 알력 발생시에 김일성에게 호소하는 등 그는 중재자로서 또는 그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지닌 자로서 인정되고 있었다.<sup>31)</sup>

그러나 전후 복구 및 건설 계획 수행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당내 분파간의 균열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당원들의 계급 의식 해이와 간부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등을 지적하면서 분파의 해악을 문제의 본질로 규정하였다.

1955년 4월 당 중앙위 5차 전원회의에서 당 사업의 오류와 결합 문제에 직면하여 양곡 구매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당의 오류를 강조하면서 김일성은 특정 인물들을 지적하고 북한의 사회 경제 실상과 사업 수행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하였다. 박창옥과 김일은 1954년 곡물 수확에 대한 허위 통계 보고 은폐와 관련하여 심한 문책을 당했다. 특히 박창옥은 비현실적인 경제 복구 및 건설 계획을 작성한 데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였다.<sup>32)</sup> 경제 정책 및 수행에 있어서의 오류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김일성은 ‘분파주의’적 행동을 경고하였다. 이전에 외국에서 활동했던 분파(옌안계, 소련계)의 리더들의 ‘출세주의’적 경향을 비난하면서, 특히 옌안계 박일우, 김운, 방호산 등을 출세 문자로 비판하였다. 이들 중 박일우에 대한 공격이 현저하였는데, 한국전쟁시 범했던 그의 과오들이 지적되었다.<sup>33)</sup> 당시 당이 처해 있던 문제의 핵심인 1954~1955년의 당 정책상의 오류에 대한 문책을 넘어서 과거 사실에 대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정식으로 비판

31) АВПРФ, ф.0102, оп.10, л.52, д.8, pp. 23~24.

32) АВПРФ, ф.0102, оп.11, л.60, д.8, pp. 181~186.

33) 박일우는 조중연합사령부의 조선총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마오쩌둥에 의해 직접 임명되었다고 선전하면서 조선군 지휘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였으며, 전쟁 시기에 소비에트 전문가들의 사업을 중국군 지휘에 대립시켰다는 것이다.

을 제기한 것은 각 분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으며, 미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 분파들의 ‘정치적 시도’에 대한 예방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은 박일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유보하면서 그가 당과 동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올바른 사업 위치에 서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당시 박일우는 북한군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 주둔 중국인민 지원군 지도부에 권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박일우에 대한 처벌은 중국과 북한군 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그에 대한 당적 처벌 유보 결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전히 분파간의 균형 유지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일종의 ‘정치적 관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4월 전원회의에서 당 사업의 결함에 대한 문책 이상의 구체적인 당적 처벌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참석한 당 중앙위 위원들도 토론에서 개별 당 및 국가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는 격렬히 비판한 데 반해 정부 및 당 지도부 자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 전원회의에서 행해진 비판은 외견상 각 분파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계와 옌안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만큼 양 분파가 다른 분파에 비해 당의 정책 결정과 사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련계는 전원회의에서의 정책 실패 문제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았다. 1955년 당시 소련 출신 고위 관료들의 대부분은 내각과 당 중앙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책 수행상의 심각한 결함들이 김일성 앞에서의 ‘아첨’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당이 자주 국내 실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함으로써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김일성이 국내 문제에 대해 보고받고 있는 정보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1954년 수확 평가나 양곡 수매 사업 등의 수행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sup>34)</sup> 이러한 지적은 특히 김일성 내부 그룹을 포함한 국내파를 겨냥한 것으로, 정책적 오류에 대한 김일성의 직접적인 책임은 제외시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 결정을 내린 김일성 또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었다.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지도부 내의 균열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당내 분파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점점 김일성 주변 세력과 더 나아가 김일성 자신에게로 정치적 책임 문제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4월 전원회의 직후 열린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지도부의 당 중앙위원회 강화 문제가 토론되었는데, 일부 정치위원들이 김일성에게 내각 수상직을 사임하고 당 중앙위 위원장직만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김일성 개인의 업무 과중에 대한 일종의 배려와 당의 강화 형식을 띤 것이었으나, 김일성으로서는 자신의 당과 정부 내 권력 지형과 관련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드디어 사태의 추이는 분파간의 균형 문제를 넘어서 하위 권력 자원 분배로부터 상층 권력·최고 권력의 분점 문제로 발전하고 있었다. 당내 경쟁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인 지도 체제의 문제가 당내 갈등의 표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직위 이양 문제는 김일성에게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모스크바 방문 이후에 결정하자는 제안으로 고비를 넘겼다.<sup>35)</sup>

그러나 상황은 권력 구조 및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소련계 및 옌안계 내부에서는 당내에 만연하고 있던 김일성에 대한 아첨과 개인 숭배 분위기를 지적하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소련공산당 지도부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 및 북한 지도부와의 회합에서 집단 지

34) АВПРФ, ф.0102, оп.11, п.65, д.45, р. 200.

35)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9, pp. 37~38.

도 원칙에 입각하여 당을 운영할 것과 당면한 경제적 곤경을 해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 등을 조언하였다. 귀국 후 6월에 개최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당내 민주주의 및 지도 체제에 관한 소련 공산당측의 이러한 견해를 언급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한 문제 결정시 집단지도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박일우 그룹에 관련된 조직적 결정을 서둘러서는 안 되며, 자신들의 오류를 실제 사업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36)</sup>

이렇듯 당내 갈등의 분출은 소련의 충고와 경제 위기 해결이라는 요인에 의해 제어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이 두 변수는 김일성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책임론’이 당내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4월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백 운동’과 지방 간부들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앙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sup>37)</sup> 이에 따라 김일성은 재차 중앙의 지도 간부의 책임성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주요 산업 부문의 책임 간부들과 경제 계획상의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토론<sup>38)</sup>을 벌인 결과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오류 발생 원인은 무엇보다 국가계획위원회

36) 위의 문서, p. 100.

37) 예를 들어 신문에는 지방 간부들의 비리 사실만이 게재될 뿐, 중앙 기관 및 간부들의 오류나 결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과 지방 간부를 검열하는 중앙의 지도 간부는 누구에 의해 검열받아야 하는가 등의 불만 등이 팽배해지고 있었다.

38) 토론 과정에서 1955년 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들이 지적되었다. 즉 주요 산업 분야의 국영 기업 책임자와 기술 전문가들은 1955년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잘못된 지표들에 의해 비현실적인 성장 속도가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1955년에 수차례 결쳐 계획이 수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와 각 부처 기관들이 하급 기관들에 ‘내리먹이는’ 관료주의적 병폐에 있다 는 것,<sup>39)</sup> 둘째, 정부 각 부처 기관들의 사업에서 할거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sup>40)</sup> 셋째, 기관 및 산업 관련 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의 약화로 인해 계획 수립상의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sup>41)</sup>

이러한 김일성의 결론은 당내 소련계 및 옌안계 지도 그룹을 겨냥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당적 제재로 이어졌다.

1955년 12월 2~3일에 소집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옌안계의 박일우와 소련계의 김열의 ‘반당’ 행위에 대한 당 중앙위 검열위원회 위원장 림해의 보고를 토론한 후 이들에 대한 당적 처벌을 결정하였다.<sup>42)</sup>

이에 따라 박일우는 반당 분자로 규정되어 출당 조치되었으며, 당 중앙 위원회 위원에서 제명되었다.<sup>43)</sup> 김열의 반당 행위는 주로 국가 재산 횡령

39) 국가계획위원회는 계획 수립시에 산업 부문별과 하부 단위의 설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 계획을 정부 각 부처에 일방적으로 시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기관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전면 수용하였는데, 중앙 부처 기관들 또한 기업소나 협동조합 등 하부 단위의 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40) 예를 들어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든지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나 내각 부수상의 참가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당면 문제들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41) 특히 당 중앙위 산업부, 재정부, 상업부, 협동 조직 부서 등이 해당 정부 부처에 대한 당의 통제를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이를 당 기관들이 대중과 유리되어 사업하고 있던 관계로 현실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할 가능성을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중앙위 각 부서로부터 정치위원회로 한 번도 현실적인 제안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라고 판단하였다.

42) 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박일우의 ‘반당’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전쟁 당시 정치위원 이자 내무상이던 박일우는 당과 국가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며 당정책에 대하여 당 앞에서는 찬성하고 배후에서는 비방하고 다니는 등의 반당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것, ② 중국 출신들(옌안계)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가족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계 조선인들을 임의로 주요 조직에 임명하는 등 당과 군대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기도했다는 것, ③ ‘소련 출신들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박현영과 연합해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을 내세우며 소련 출신들과 중국 출신들을 대립시켰다는 것, ④ 박현영, 이승엽 등과 결탁하여 당을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하였다는 것, ⑤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막대한 국가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것 등이다.

43) 박일우는 1955년 6월 아래 정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체신상에서 직위 해제되어 가택

과 풍기 문란에 관한 것이었다. 김열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서면으로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체포되어 인민 재판에 회부되었다. 전원회의는 김열을 출당시키고 당 중앙위 위원에서 제명하는 당적 차별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반당’ 행위의 내용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인 부정 부패나 정책 집행상의 오류라는 문제를 넘어서 박헌영 등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은 당내 권력 갈등이 표출되어 양 분파에 대한 김일성과 내부 그룹의 정치적 조치가 본격화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양 분파에 대한 이러한 상징적인 차별 외에도 전원회의에서 소련계 지도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진행되었다. 김일성은 소련계 정률, 손진화, 정국록, 기석복, 전동혁 등을 거명하면서 조선 문인들 사이에 반복을 조장하고 이승엽 그룹에 참여했던 이태준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또한 당시 소련계의 대표적 인물이던 박창옥을 지목하고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경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료주의적 폐해를 조장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당 선전선동부장이었던 박영빈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 박영빈이 여러 번 제의했던 서휘의 철직 사건이 부적절했음을 거론하면서 소련계와 옌안계 간의 미묘한 대립을 부각시켰다.

12월 27일과 28일 이틀간에 소집된 당 중앙위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은 박창옥, 박영빈, 기석복, 전동혁, 정률 등에게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박창옥의 경우 100여 가지의 죄목이 부여되었다. 그 중에는 김일성을 대신하여 ‘제1인자’의 지위에 오르려 했다는 죄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56년 1월 18일, 상무위원회는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범한 반당적 과오를 비판하면서 박창옥을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정치위원직에서, 박영빈을 정치위원 및 중앙위 위원직에서 제명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sup>44)</sup> 이로써 소

---

연금된 상태에서 당 조직지도부장 박금철의 책임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받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55), 51~60쪽.

련계는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으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서는 다른 정파와의 연대나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1955년 12월에서 1956년 1월 사이에 숨가쁘게 진행된 일련의 사건은 그 정점으로서의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전원회의 사건의 직접적인 단초가 이미 이 기간에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일 정당 체계하에서 당내 경쟁은 종종 분파 지도자들간의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 투쟁'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1955년 말에서 1956년 초에 발생한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는 김일성의 당내 경쟁에 대한 조정 방식이 간부 인사를 통한 하위 권력 배분이나 1955년 전반기에 행해졌던 각 분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넘어서 각 분파 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권력 박탈이라는, 당내 경쟁의 정치적 기반과 기회의 박탈 형태로 급전되었다는 점이다. 1956년 1월 상무위원회에서 내린 박창옥에 대한 책벌 내용에서 보여지듯이 당내 경쟁의 초점은 이미 최고권력 획득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사르토리적 개념의 '분파'(fraction)나 로즈의 '경향'(tendency)에 가까웠던 각 정파들은 김일성과 내부 그룹의 시각에서는 이제 최고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한 조직적 결속력을 갖춘 '종파'나 '파벌'로 규정되었다. 김일성은 이전과 같이 더 이상 각 분파간의 당내 경쟁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대면투쟁'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 환경과 조건 변화에 직면하여 각 분파들(옌안계와 소련계) 또한 이전의 느슨한 분파적 결합에서 조직적 결속력과 최고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지닌 '파벌'적 결합으로 전화되어 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김일성 및 그 내부 그룹과 옌안계 및 소련계가 당내 최고 권력을 목표로 한 쌍방간의 전면적인 '대면 투쟁'에 돌입한 것이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이다.

44) "문학예술 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56), 49~58쪽.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1월 상무위원회의 결정이다. 동 위원회에서 결의한 “문학예술 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과 이에 대한 당내 토론은 외견상 사회주의적 문학 논쟁을 연상시킬 수도 있으나 이 문제의 핵심은 문학 예술 분야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당 정책상의 오류와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당내 갈등이 이데올로기 차원의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핵심은 문학 예술 논쟁이 아니라 각 분파 지도자들의 연루 문제였으며,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의 유포 문제였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의 정치적 의도이다. 1955년에는 당 지도부 내의 갈등뿐 아니라 전 사회적 차원에서 사상 투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4월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및 경제 기관, 그 일꾼들과 전체 당원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가와 상인들까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자백 운동’에 망라되었다. 이러한 전 사회적 차원의 자아 비판 및 자백 운동과 사상 투쟁의 상충 정치 차원의 충돌이 위에서 언급한 1월 상무위원회의 결정이었으며, 1955년 12월 말의 ‘주체’라는 용어의 제기와 더불어 이후 김일성의 주체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장애의 제거와 각 분파들에 대한 사상적 투쟁이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의도하는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1월 상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당내 경쟁 토대를 결정적으로 상실한 소련계와 옌안계에게 있어서 소련공산당 20차 당 대회는 정치적 반전의 기회로 보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양 분파가 당내 경쟁 기반을 회복하고 권력 분점을 목표 달성을 재시도하기 위해서는 로동당의지도 체제 문제와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 어져야 하는데, 당내 상충 권력 기반—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을 거의 상실한 그들로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20차 당 대회에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 지도 체제와 같은 당의 지도 원칙 문제들

이 토의될 안건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북한 지도부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므로 김일성은 동 대회에 최용건을 대신 파견할 것을 정치위원회에 제안하였다. 소련공산당 20차 당 대회는 개최 전부터 북한 지도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20차 당 대회 기간 중(2월 14~25일)에 김일성은 소련계와 여타 당 지도간부들에 대한 유화 조치를 취하였으며, 개인 승배 경향이 당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sup>45)</sup>

2월 20일에는 당 중앙위 부서장, 내각 책임 간부 및 장관들과의 회합에서 그간의 소련계 지도 간부들과의 옳지 못한 관계들을 지적하고<sup>46)</sup> 전 노당위원회에 지시하여 소련계에 대한 비판 모임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1955년 12월 전원회의와 1956년 1월 상무위원회 결정 사이에 직위 해제된 일련의 소련계 지도 간부들을 이전의 직위로 복귀시키거나 그 와 상응하는 직위에 임명하였으며, 소련계 탄압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당 간부들은 좌천되었다.<sup>47)</sup> 이렇듯 소련공산당 20차 당 대회의 영향은 김일성

45) 2월 18일에 열린 부수상 및 당 중앙위부장들과의 회의에서 김일성은 '여사 사회 반전에 있어서의 개인의 역할에 관한 문제가 잘못 해명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김일성)의 이름이 신문이나 잡지 등에 지나치게 자주 등장하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많은 부분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는 등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당 선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당 중앙위 부서장들에게 지시하였다.

46) 이 회합에서 김일성은 '소련 출신 일꾼들은 조선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조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지도적 위치에서 혁신적으로 일하였으며,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주의 사업 방식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록 그들 중의 일부가 오류를 범했을지라도 이미 비판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들이 교정해 나가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당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47) 예를 들어 1955년 12월 전원회의와 1956년 1월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소련 출신 간부들에 대한 탄핵을 하급 당 기관에 지시한 평양시 당 위원장 고봉기는 황해남도당 위원장으로 좌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소련계와 국내 출신 당 간부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д.6, п. 129.

그룹으로 하여금 여타 분파들에 대한 전면적 공격에서 후퇴하여 상황에 대한 수세적 방어 전술을 수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과 내부 그룹이 집단 지도 원칙과 개인숭배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오류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소련공산당 20차 당 대회의 결정인 집단 지도 원칙을 수용하는 한편, 개인 숭배의 책임을 박현영과 허가이에게 지우는 이중 전술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이중 전술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로동당 3차 대회의 분위기를 암도하면서 공식화되었다. 당 대회의 토론의 주된 기조는 당 중앙위원회가 당이 창건된 이래로 집단 지도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단 지도 원칙이 당 조직 지도 노선임을 합리화하는 한편, 개인 숭배 문제 토론을 박현영 비판 일색으로 진행시켜 김일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공격을 애초에 차단하는 방향에 맞추어졌다.<sup>48)</sup>

당 조직 지도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3차 당 대회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소련계와 옌안계는 당 지도부에 이념적 충격(ideological impact)을 줄 것으로 예상했던 브레즈네프의 당 대회 연설이 개인 숭배 배경과 당내 레닌적 집단 지도 구현에 관한 원칙적인 강조에 그치자 크게 실망했다.<sup>49)</sup>

이러한 상황하에서 소련계는 북한로동당 지도부, 특히 김일성에 대한 소련공산당의 특별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충고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아하였으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이후 적극적인 상황 반전 시도로서 옌안계가 계획했던 ‘반김일성 투쟁’, ‘김일성 제거 계획’ 과정에 소련계가 동

48) 당시 주 소련 대사 이상조의 경우 당내에 존재하는 개인 숭배 문제에 대한 토론을 당 대회 상무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제안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소련계 지도 간부들이 김승화(건설상, 당 중앙위 상무위원), 박창옥 등이 3차 당 대회 기간중 빌언하여 했으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사실은 3차 당 대회 분위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д.6, pp. 255, 278~279.

49) 실제로 당 대회 토론 분위기는 “개인 숭배와 그 후과에 관하여”라는 소련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한 흐루시초프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당내 문제들이 소련공산당에 국한된 것이지 북한로동당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참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1956년에 들어와서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다. 배급권을 수령하지 못한 실업자가 '시' 단위에만 7만 명이 넘는 등 인구의 절반이 기아선상에 있었으며, 소련과 여타 국가들로부터 공여받은 막대한 양의 원조 물자가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당 중앙위 상무위원회는 경제 상황과 인민의 물질 생활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원조를 재차 요청하기 위하여 소련 및 동구 국가 방문 계획을 수립하였다. 3차 당 대회 후 김일성은 당 중앙위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당 중앙위 주요 단위에 내부 그룹을 충원하여 소련계와 옌안계의 당내 복귀에 따르는 조직적 견제 및 통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소련계 및 옌안계에게 있어서 향후 당내 대면 투쟁에서의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sup>50)</sup>

6월 2일 김일성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소련과 동구권 순방길에 오르자 옌안계를 중심으로 김일성과 내부 그룹에 대한 권력 교체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2그룹, 2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제I그룹은, 옌안계 중심의 '지하 그룹'으로 정부와 당내 지도 간부뿐만 아니라 고위 장교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리필규<sup>51)</sup>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월 20일 소련 대리 대사 페트로프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노동당 중앙위 지도부 교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일군의 지도 간부들로 구성된 '지하 그룹'이 김일성과 그 측근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들이

50) 인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금철 : 조직부장 겸 당 검열위원장, 김창만 : 선전선동부장 겸 과학부장, 정일련 : 공업부장, 박정애 : 간부부장, 림해 : 대남연락부장 등. АВПРФ, ф.0102, оп.12, л.68, д.6, pp. 205~206.

51) 리필규는 6군 사령관, 내무부상을 역임하는 등 인민군 총참모부 채직 시절부터 박일우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으며, 박일우 숙청과 함께 건재공업국장으로 좌천되었다. 따라서 박일우와 더불어 인민군 내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모색한 계획은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당 중앙위원회 등에서의 ‘당내 비판과 자아 비판’에 의해 교체하는 방식과 ‘무력 전복’에 의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자의 방식은 김일성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실효성이 없는 방식으로 기각하고 후자에 의한 방식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그룹은 후자의 방법으로 거사할 사람들이 당정 지도부 내에 존재하며, 김두봉, 최창익, 최용건, 박의완 등이 자신들의 계획에 공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sup>52)</sup> 전자의 방식이 ‘제도’를 통한 당내 경쟁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후자의 방법은 이미 당내 경쟁을 넘어선 쿠데타의 성격을 띠는 정치 변동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의 결과 단일 정당 체계에 고유한 정당성—당내 제도(중앙위나 정치위원회 등)를 활용하여 당내 경쟁을 통한 권력 획득—은 부정되는 것이다.

제2그룹은 소련계 중심의 ‘당내 비판’ 그룹이다. 김승화 등 소련계는 김일성의 지도 방식에 대한 정부와 당내 간부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옌안계가 반김일성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감지하자 그들도 또한 김일성에 대한 대항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리필규 등의 ‘지하 그룹’이 무력에 의한 김일성 중심 지도부 교체 방식을 선호한 데 비해서 이 그룹은 좀더 온건한 방법을 모색 중이었는데, 김일성이 동구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까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 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들은 당내 비판과 자아 비판을 통한 상황 반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으며,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통로로서 다가올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있었다.<sup>53)</sup>

52) 리필규 등 반김일성 ‘지하 그룹’이 김일성의 최측근인 최용건을 자신들의 동조자로 과 악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박창옥 또한 후에 최용건을 거사시 동조 자로 확신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용건이 당시 김일성의 당 지도와 관련하여 불만을 몇 차례 토로한 적이 있음에 주목하고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참여와 관련하여 그들이 개별적으로 최용건의 의중을 떠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소련계와 옌안계 그룹 모두 최용건이 김일성의 최측근임으로 해서 더욱더 그를 자신들의 계획에 설득, 동참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반김일성 계획은 처음으로 옌안계와 소련계를 굳게 결속시키는 동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연합은 김일성과 내부 그룹이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이들의 연합을 분리, 약화시키는 절박한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두 가지 전술, 즉 유화책과 지연책이 활용되었다.

김일성과 내부 그룹은 8월 2일로 결정된 전원회의 일정을 별다른 해명 없이 지연시키면서 김일성 반대 세력을 동요시키고 그들의 계획 실행 일정에 혼란을 일으켰다. 지연 기간 동안 김일성과 내부 그룹은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예상되는 반대 세력의 공격에 대비하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원회의 진행 시나리오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 전술과 더불어 당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유화 전술을 구사하였다. 7월 30일 소집된 당 중앙위 부서장 회의에 각 성의 장관들을 초청한 후, 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금철은 참석자들에게 당 중앙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그는 김일성 개인 승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한 뒤, 이러한 개인 승배와 그 후과를 극복하기 위해 당 중앙위 지도부가 이 문제를 광범위한 대중 토론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렸다. 또한 그는 지도 간부 선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당 중앙위가 실수를 범했음을 참석자들 앞에서 인정하였다.<sup>54)</sup>

김일성과 내부 그룹의 이러한 ‘긍정 전술’(positive tactics)은 김일성 반대 세력의 주요 이슈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김일성과 내부 그룹에 대한 불만을 지난 간부들을 반김일성 세력으로부터 중립적 위치로 전화시

53) 이들은 ‘지하 그룹’에 비해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박창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김일성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후 만일 김일성이 자신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토론에 부친다는 식의 발상을 지니고 있었다. ABPRF, Փ.0102, օլ.12, լ.68, դ.6, pp. 352~353.

54) ABPRF, Փ.0102, օլ.12, լ.68, դ.6, pp. 370~373.

키거나 분리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김일성과 내부 그룹의 이러한 대비책과 더불어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는 소련의 입장이었다. 오히려 김일성 그룹의 어떠한 대비책보다도, 또 김일성 반대 세력의 어떠한 계획보다도 사태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가 바로 소련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55)</sup>

당시 소련은 북한 당 지도부의 안정성 확보를 원하고 있었다. 1956년 6월 북한 정부 대표단의 소련 방문시, 김일성 및 당지도 간부들과 소련공산당 지도부 간의 회합에서 소련 지도부는 김일성 개인 숭배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에서 개인 숭배가 위험한 수준인 것은 아니므로 이 문제를 광범위한 대중 토론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모스크바의 입장은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페트로프의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외무상 남일파의 면담에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에 대한 반대 세력의 공격은 당 지도부의 권위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당 대중과 전 인민들에게 지도부의 균열을 드러내 놓는 것이며, 당 차원의 광범위한 논란을 초래해 원치 않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는 의견에 동감하면서 박창옥 등 소련계에게 반김일성 계획을 주도하지 말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56)</sup>

소련은 소련 출신 지도 간부들이 김일성 제거 계획을 주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소련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원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당시 불안정한 동구 정세(폴란드, 평가리 등)를 감안할 때, 동북아의 대 서방 접

55) 한국전쟁과 스탈린 사후에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 변동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0여 달리 원조를 필두로 전후 북한의 경제 복구 건설 계획과 수행 과정에 결정적인比重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전 체제와 관련한 국제 협상과 UN에서의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활동 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 간부 중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동원할 수 있는 '소련계'라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56)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л.6, pp. 363~365.

점인 북한 지도부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소련이 원치 않는 결과였던 것이다. 김일성 제거 계획에 대한 소련의 이러한 입장은 반김일성 세력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당내 권력 자원 확보에 있어서 김일성에 비해 열세였던 그들에게 외부의 지원은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국내외 상황은 김일성 반대 세력에게 불리하게 전개 되었으며, 김일성 반대 세력 내부 또한 확고한 대항 방침이나 공격 의지가 퇴색되었다. 최창익이나 박창옥 등 계획을 주도해야 할 양 분파의 지도자들조차도 전원회의에서 ‘비판은 하되 반대나 대항은 않는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김일성 그룹은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전원회의 일정 (8월 30~31일)을 발표하였다. 원래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정부 대표단의 동구 순방 보고와 인민 보건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었다. 그러나 회의 첫날 김일성의 동구 순방에 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첫 토론자로 등장한 상업상 윤공흠이 의제와 관련 없는 당내 개인 승배 경향과 당 간부 선발 배치의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김일성과 그 내부 그룹을 비난하자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은 일제히 김일성을 옹호하면서 반대 세력의 행위를 반당적 행위로 공격하였다. 전원회의는 그들의 행위를 ‘반당적 종파 음모’로 규정하고 제명 및 출당 조치라는,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결정하였다.<sup>57)</sup> 이렇듯 북한 역사상 유일무이한 조직적인 김일성 제거 계획은 제대로 시도되지도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다.

옌안계 중 윤공흠, 서휘, 리필규, 김강 등은 전원회의 도중 중국으로 비

57) 8월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창익 :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제명, 내각 부수상 및 기계공업상에서 철직, 윤공흠 :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제명, 상업상에서 철직, 서휘 :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제명, 당에서 출당, 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에서 철직, 리필규 :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제명, 당 대열에서 출당, 내각 건재공업국장에서 철직 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56), 12~17쪽.

밀리에 망명하였다. 8월 전원회의 소식에 접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소련 측을 설득하여 북한 정치에 개입하기에 이른다. 소련 부수상 미코얀과 중국 국방부장 평더하이는 9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에게 8월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sup>58)</sup> 김일성은 이를 수용,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신중성 부족을 인정하였다. 9월 23일 개최된 9월 전원회의에서 8월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여 최창익과 박창옥 등 옌안계 및 소련계의 분파 지도자들을 중앙위원회으로 복직시키고, 출당자들을 복당시켰다. 9월 전원회의 시기는 김일성 정권의 최대 위기였다.<sup>59)</sup>

### III. '제3당 사건'과 대숙청

#### 1.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

1956년 10월 형가리 사태가 발생하여 국제 공산 진영이 분열하고 1957년부터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함에 따라 김일성은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중·소간의 갈등은 1949년 중국혁명 성공 직후 스탈린과 모택동 간의 국제 정세 인식에 대한 불편한 관계와 한국전쟁 지원 과정에서 이미 내연

58) 1956년 9월 평양을 방문한 평더하이와 미코얀의 당초 목적은 김일성을 직위 해제시키거나 김일성에게 집중된 권력을 각 분파에게 재배분하는 것이었으나 김일성에 대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 및 당 간부들의 지지가 그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확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본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소련계와 옌안계 지도 간부들에 대한 당으로의 원상 복귀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5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1956), 24쪽.

된 것이긴 하나 1956년까지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련 모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향소 노선’이 말해주듯이 양국은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양국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 소련공산당 20차 대회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대회 직후 중국은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에 대한 반비판을 소련측에 전달하면서 흐루시초프의 신노선(개인 승배 비판, 평화 공존 및 이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였다.<sup>60)</sup>

이러한 상황하에서 1956년의 폴란드 포즈난 사태와 헝가리 민주화 운동은 소련을 외교적으로 곤란에 처하게 만들었다. 20차 당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 폴란드 노동당 제1서기 보레슬라프 베루트가 사망하고, 당 대회의 스탈린 비판에 힘입어 폴란드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하자, 9월 흐루시초프를 위시한 소련 지도부는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무질서’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폴란드에 주둔하던 소련군의 무력 시위를 이용하였다. 또한 헝가리 사태에 개입하여 임례 나지 정부를 강제로 퇴진시켰다.<sup>61)</sup>

이러한 소련공산당의 ‘형제당’에 대한 내정 개입으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 내의 불만을 활용하여 자신의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회로 삼았다. 1957년 1월 저우언라이의 소련 및 동구 순방은 이러한 국제적 지위 격상 시도의 일환이었으며, 소련은 동구에서의 불협화음을 조정하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시도를—이

60) 스탈린 비판에 대한 중국의 반비판의 요지는 첫째, 스탈린의 공과 중 공적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는 것, 둘째, 국제적인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스탈린에 대한 평가를 일국 공산당 대회(소련)에서 독점 비판하고 있다는 것, 셋째, 사회주의 진영 내의 문제를 전 세계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비판이 시사해 주는 바는 흐루시초프의 소련을 사회주의 진영 내의 일개 국가로 치부하여 내용적인 격하—물론 당시에도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소련을 사회주의 진영의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재선, 『중화인민공화국』, 122쪽 참조

61) 드미트리 안토노비치 볼코고노프, 김일환 외 역, 『크렘린의 수령들』, 상권(서울 : 한송, 1996), 462~463쪽 참조

것이 이후 동구 및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중국의 발언권 강화를 결과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동구 순방을 통해 소련과 폴란드, 헝가리 간의 정치적 갈등 관계를 교묘히 활용하여 조치하였다.

대 소련 관계 또한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향소 일변도’의 입장을 시정하여 ‘향소 노선은 중·소의 평등 속에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1957년 들어서면서 ‘중·소간의 갈등’이 당·정 간부 사이에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중국측의 분명한 대외적 입장 표명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62)</sup>

1957년 11월, 소련의 10월혁명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더화이, 덩샤오핑 등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방문한 마오쩌둥은 “평화 이행 문제에 관한 의견 요강”이라는 문건을 통해 “전술적 관점에서 평화 이행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평화 이행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프롤레타리아트나 공산당의 혁명적 의지를 약화시키고 사상적으로는 스스로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특히 당시 미국이 1957년 6월 이후 중국과 북한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신형 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중국으로 하여금 이념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평화 공존 및 이행’의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sup>63)</sup>

소련의 ‘신노선’에 대한 중국측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대 북한 원폭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던 북한측의 공감을 받기에 충분하였으며, 중국 또한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소련과 주도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동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따라서 중국은 1956년 9월 북한에 대한 정치적 개

62) 이재선, 『중화인민공화국』, 122~123쪽.

63) 위의 책, 123~124쪽 참조

입 이후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957년 11월 마오쩌둥은 모스크바 방문시에 김일성에게 전격적인 화해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김일성과 내부 그룹에게 있어서 여타 분파에 대한 제거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종파 투쟁’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화해 움직임은 북한측의 기대 이상이었다. 김일성과 대담한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1956년 9월에 중국공산당이 북한 로동당의 내부 문제에 개입한 일에 대해 ‘사과’(북한측의 표현)의 뜻을 표명하고 당시 중국이 개입을 위해 평더화이를 북한에 파견한 일은 옳지 못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 후 이후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더 나아가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중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분파 지도자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북한의 경제 정세와 관련하여 마오쩌둥은 북한 지도부의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과 농업의 병행 발전’ 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sup>64)</sup> 또한 흐루시초프도 김일성과의 대담에서 김일성이 지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중국과 소련 지도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8월 전원회의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결과적으로 보증해 주고 김일성의 정책 노선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중국과 소련과의 갈등은 1958~1959년에 벌어진 중·소간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립—특히 국방 분야 협력 문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

1958년 7월, 중국의 요청에 따라 흐루시초프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의제의 핵심은 양국간의 공동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공동 함대의 편성과 레이더 기지 건설 문제였다. 흐루시초프의 공동 함대 편성 제의에 대해 중

64) 1956년 9월 전원회의에 직접 개입한 당사자인 평더화이 또한 김일성에게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АВПРФ, ф.0102, оп.13, п.72, д.6, pp. 366~370.

국 내 여론은 ‘중국 옌안 지역을 통제하고 봉쇄하려는 의도’로 비판하였고, ‘자국의 해역은 자국이 수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흐루시초프의 제안을 거부했다. 양국간의 회담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마오쩌둥이 회담 말미에 흐루시초프에게 한 “다음 번 회담에서는 서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당시 양국간의 긴장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sup>65)</sup>

1959년에 들어서면서 양국간의 대립은 더욱 표면화되었다. 2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21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평화 공존 및 평화 경쟁 노선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평화 공존 정책을 강조할수록 중국과의 협력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어갔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소련에게 핵실험 및 핵화산 금지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서독의 핵무장 저지를 위해 대미 적극 외교를 펼치고 있던 소련으로서는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6월에 소련은 중국과 체결한 ‘국방용 신기술 협정’을 파기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우려하고 있던 중국이 당시 소련으로부터 기대하던 군사 분야의 신기술 제공이 거부되자 중국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인도 국경 분쟁에서 보여준 소련의 중립적인 태도는 양국간의 국가적 차원의 이해 관계 대립을 심화시켰다.<sup>66)</sup>

중·소간의 대립과 맞물린 1957~1958년의 대대적인 반김일성 세력에 대한 제거 작업은 중·소간의 협력 관계의 균열로 인해 1956년 9월의 경우와 같이 외부의 개입 여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은 김일성과 내부 그룹에게 국면 전환과 더불어 당내

65) 이재선, 『중화인민공화국』, 198~199쪽 ; 드미트리 안토노비치 볼코고노프, 김일환 외 역, 『크렘린의 수령들』, 상권, 506~508쪽 참조

66) 이재선, 『중화인민공화국』, 201~202쪽 ; 드미트리 안토노비치 볼코고노프, 김일환 외 역, 『크렘린의 수령들』, 상권, 508~509쪽 참조

분파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단일 지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치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 2. '제3당 사건'과 단일 지도 체제의 형성

1956년 9월 전원회의 후 미코얀과 평더화이가 평양을 떠난 직후부터 당 중 교환 사업을 시작으로 다시 반대파 제거 작업이 시작되어<sup>67)</sup> 1959년 그 막을 내릴 때까지 김일성과 내부 그룹은 '주체'를 기반으로 한 '단일 지도 체제' 형성을 목표로 전 사회적 차원의 '반종파 및 사상 투쟁'을 단행하였다.

1956년 말부터 지역 당 기관에서는 사상 검증 작업과 자아 비판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최창익과 관련된 당원 및 간부들에 대해 철직 및 출당 조치가 내려지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당중 교환 사업은 명목상 북로당 시절에 교부된 구 당중을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당원의 사상의식 고취와 '최창익 그룹' 관련자들의 색출 및 출당—를 내포한 것이었다.

1957년에 들어서면서 중앙 차원의 전 국가 기관 및 당 기관뿐만 아니라 산하 단체들에 대한 사상 검증과 '최창익 그룹'과의 관련자 색출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sup>68)</sup> 그 대상자 및 범위에는 소련계 및 옌안계뿐만 아니

67) 예를 들어 평양시 당위원장 홍순관의 경우 9월 전원회의의 결정으로 복직된 지 2달 만인 11월에 최창익과의 관계 문제로 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당했다(ABPRF, F.0102, o. II.13, II.72, d.6, pp. 1~4).

68) 교육성의 경우, 8월 전원회의 이후 중등 및 고등 교육 기관의 교원 및 학생들 사이에서 형가리 사태와 관련하여 사상적 동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대대적인 교원 교체의 필요성—평양에서만 약 3,000명—to 제기하였다(ABPRF, F.0102, o. II.13, II.72, d.6, pp. 198~199). 외무성의 경우, '최창익 그룹'과의 관련성 문제로 외무성 당 위원회 비서, 주소련 북한 대사 등 외무성 내 주요 간부들이 철직당하였다(ABPRF, F.0102, o. II.13, II.72, d.6, pp. 267~269, 298~299). 문화선전성의 경우, 1957년 2월에서 8월까지 매일

라 이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방조’의 혐의를 받고 징계되었다.

1957년 이후의 사태 전개는 이전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먼저 1956년 8월 전원회의 결정에서 지적하였듯이, 8월 사건은 각 분파(소련계와 옌안계)의 지도자들이 평양시 당 위원회 및 성·국 ‘일부’ 추종자들을 추동한 ‘반당 종파 음모’사건의 계획으로 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음모’의 주체와 목적, 그리고 연루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직위에 대한 불만’이나 ‘일부의 추종자’, 그리고 최창익, 윤공흠, 서희, 리필규, 박창옥 ‘등’에 의한 ‘종파적 음모’로 규정되었으나 1957년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최창익 그룹’ 사건으로 구체화되었다. 다음으로 사건의 범위와 대상이 ‘일부’에서 전 국가 기관과 당 기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전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갔다. 물론 ‘최창익 그룹’의 추종자—목적과 행동을 같이한—가 그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데는 판단 근거가 미약하지만<sup>69)</sup> 사태는 이미 전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창익 그룹’ 사건은 ‘제3당’ 사건과 연결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직위 불만’이라는 ‘당내 갈등’의 문제로부터 이승만 정권 및 미국과 연결된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한 ‘간첩 사건’으로 비화되어 ‘당내 경쟁’으로부터 ‘체제 전복’으로 문제가 확대, 변질되었다.

---

진행된 당 위원회 비밀 회의에서 ‘종파’ 관련으로 문화선전부상을 비롯하여 13명의 간부가 체포 및 구금되었고 50여 명이 전보 조치되었으며, 간부뿐만 아니라 문화선전성 산하 다수의 예술 관련 종사자들도 ‘당의 적’으로 폭로되었다(ABTPF, Փ.0102, оп.13, թ.72, ձ.6, պ. 280~282). 법무성의 경우, 법무상 홍기주, 법무부상 박영숙, 최고재판소장 황세환, 검찰 부총장 김동학 등을 포함한 다수의 실장과 국장들이 철직당했다(ABTPF Փ, Փ.0102, оп.13, թ.72, ձ.6, պ. 325~327). 과학아카데미의 경우, 중앙당 역사학교장인 이정원 등이 철직 조치를 당했다(ABTPF, Փ.0102, оп.13, թ.72, ձ.6, պ. 330~334).

69) 김일성과 내부 그룹이 정치적인 의도로 사건을 확대시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련계와 옌안계 지도 그룹 내에서도 ‘최창익 그룹’ 등의 계획에 부정적이거나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련계의 박의완, 옌안계의 김두봉 등은 동 ‘계획’에 직접 간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후 이 문제로 속청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전 국가 기관 및 당 기관 차원에서의 사상 검토 및 ‘최창의 그룹’ 관련자 색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은 김일성과 내부 그룹으로 하여금 정치적 정당성을 합리화시켜 주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동인은 외부로부터 주어졌다.

먼저 1957년 6월 소련공산당 내에서 발생한 ‘반당 그룹’ 사건이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56년 6월 말렌코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등 당내 분파 지도자들의 ‘반당 음모’ 사건을 폭로하였다. 여러 면에서 북한의 8월 전원회의 사건과 유사한 이 사건은 1957년 봄, 당시 흐루시초프와 함께 당내 최고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던 말렌코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등이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들과의 비밀 회동을 통해 흐루시초프를 축출하는 계획을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보로실로프, 불가닌 등이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여 중앙위 간부회의라는 실질적인 당 최고 권력 기구가 흐루시초프의 축출에 동의하는 양상이었다. 6월 중앙위 간부회의에서 말렌코프 등은 경제정책에서의 오류와 집단 지도에 대한 경시 등을 이유로 흐루시초프를 비판하고 제1서기직 경질을 요구하였다. 흐루시초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투표’에서 ‘경질 안건’이 통과되었으나 흐루시초프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KGB 의장 시로프와 국방상 주코프의 지지하에 개최된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흐루시초프는 과거 스탈린의 ‘대숙청’(1936~1938) 당시 말렌코프와 몰로토프 등의 역할을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지 않던 중앙위원들에 의해 대숙청의 잔혹함을 떠올리면서 말렌코프 그룹에 대한 야유와 장시간에 걸친 신랄한 비판이 진행되었고 회의는 흐루시초프의 승리로 끝났다. 전원회의는 말렌코프, 몰로토프 등의 중앙위 정치국원 등 중앙위에서의 직위를 박탈하였고, 이후 불가닌은 수상직에서 칠직당하였다.<sup>70)</sup> 이로써 흐루시초프는 제1서기직과 수상직을 겸하게 되었고 당과 정부의 명실상부한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권력의 일인 집중도는 심화

되어 ‘집단 지도’라는 원칙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소련공산당 내에서 발 생한 이러한 정치 환경 변화는 김일성과 내부 그룹에게는 정치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7월에 열린 중앙위 상무위원회에서 김일성이 소련공산당 6월 전원회의의 결정에 대해 소련공산당 지도부의 견고성 유지와 ‘형제 당’들과의 연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결정을 전 당 및 국가 기관, 전 인민적 차원에서 토론할 것을 지시한 점은 이 사건이 북한 지도부에 미친 영향을 잘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이미 언급한 1957년 11월 마오쩌둥과 평더화이가 김일성에게 한 ‘사과’성 발언이다. 사회주의 진영 내의 갈등에 직면하여 소련과의 주도권 경쟁을 위한 유리한 입지 선정을 위해 북한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1956년 9월 북한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대한 ‘사과’를 통해 김일성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소련의 ‘반당 그룹’ 사건의 결과 흐루시초프의 권력 집중이 김일성과 내부 그룹에게 (단일) 지도체제에 있어서 ‘원칙’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면, 마오쩌둥의 사과성 발언은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적 동기에 고무되어 12월에 열린 당 중앙위 확대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은 ‘반당 종파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정치) 사회에 전반에 걸친 ‘청소’(숙청)를 단행하게 된다.

12월 5~6일 진행된 확대 전원회의는 김일성과 내부 그룹에게 있어서 그 규모(1,509명 참가)나 내용면(각 분파의 지도자들에게 발언 허용)에서 그간의 ‘반종파 투쟁’을 총화하기에 손색이 없었으며, 매우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러시아혁명 40주년 기념 대회 참석에 대한 김일성의 사업 보고 및 토론이 주요 안건이었다. 모스크바에서 이

70) 드미트리 안토노비치 볼코고노프, 김일환 외 역, 『크렘린의 수령들』, 상권, 535~539쪽 참조.

루어진 마오쩌둥과 평더하이와의 대담과 김일성의 정책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지지 발언 등이 보고된 후 토론은 ‘종파’ 문제로 자연스럽게 옮아갔다. 회의에서 ‘8월 사건’과 관련한 중국과 소련의 개입은 ‘대국주의적 쇼비니즘’으로 성토되었고, ‘종파 분자’들의 무장 봉기 계획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회의는 모스크바 회의 결산에 대한 토론보다는 ‘종파 분자’와의 투쟁에 집중되었고, 박의완 등 각 분파 지도자들의 ‘8월 사건’에 대한 결백 해명은 야유 속에 묻혀버렸다. 회의 내용 중 지적할 만한 것은 김두봉이 ‘8월 사건’의 주모자 중 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목된 점이다. 이에 대해 김두봉은 ‘종파 분자’들이 자신을 ‘이용’한 것이며 이 사건에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에 대한 자신의 일정한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당의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회의를 종결하면서 김일성은 종파 척결에 대한 의지와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종파 투쟁에 대한 관용을 제의한 중국측의 입장에 대해 김일성은 “그들은 긴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이 단계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쉽게 ‘관용’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장기간 투쟁을 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당 노선이 정당했음을 ‘그들(중·소)’이 과오를 인정한 점을 들어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종파와의 투쟁을 ‘1년 더’ 진행시킬 것을 주장하였다.<sup>71)</sup>

12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하여 ‘종파 사건’은 1958년에 들어서면서 ‘국가 전복 음모’ 사건으로 발전한다.

1958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당 대표자 대회에서 ‘최창익 그룹’ 사건은 공식적으로 ‘국가 전복 음모’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당의 단합과 유대의 지속적인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회 둘째 날 ‘최창익 그룹’을 여타 ‘종파

71) АВПРФ, ф.0102, оп.13, п.72, д.6, pp. 377~383 참조

주의자'들과는 질적인 차별성을 지닌 '수정주의'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최창익 그룹'이 권력 쟁취 후 '중립 국가화' 선언을 토대로 이승만과 결탁하고,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북한을 분리해 내려는 목적으로 음모를 계획했다는 점이 폭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8월 전원회의' 사건이 앞서 분석한 애초의 성격—'당내 경쟁'이라는, 제도를 활용한 최고 권력 획득 또는 체제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을 넘어서 목적과 성격, 그리고 형태면에서 질적으로 상이한 '체제 변동 사건'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내무성의 조사로는 이승만 정권이 이미 1956년 초부터—구체적으로는 2~3월—북한 정권 전복을 위한 인민 봉기를 준비하면서 '최창익 그룹'의 계획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창익 그룹'의 군중 시위 및 무장 봉기 계획도 폭로되었다.<sup>72)</sup> 예를 들어 평양 근교에 주둔중이던 4군단과 평양 시내의 공병부대, 방공 포대 등이 8월 전원회의에서 반김일성 비판이 개시됨과 동시에 조직하기로 했던 평양 시내 군중 시위 동안 이들을 지지하는 무력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는 것이다.<sup>73)</sup> 만약 이러한 계획이 사실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반김일성 세력 중 '지하 그룹'인 리필규 등의 계획일 가능성성이 있다. 그러나 사후 결과를 볼 때—'계획' 과정이나 8월 전원회의에서 보여주었듯이—반김일성 세력의 일치된 견해나 확고한 행동 통일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과연 무력시위 계획이 가능했겠는지, 그리고 당시 옌안계나 소련계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가 미약한 상태—특히, 소련계의 특권 의식에 대해 당원과 인민들 사이의 거부감이 팽배해 있었음을 볼 때—에서 군중 시위 조직이 가능했겠는지 등이 내무성이 발표한 사태 개요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다.

'최창익 그룹'의 '국가 전복 음모' 사건은 청우당, 민주당, 조국평화통일

72) АВПРФ, ф.0102, оп.14, п.75, д.8, pp. 117~120 참조

73) АВПРФ, ф.0102, оп.14, п.75, д.8, pp. 99~101 참조

촉진위원회(한국전쟁 중 월북한 남한 국회의원들이 중심) 등이 연루된 ‘제3당’ 사건으로 연결된다. ‘최창익 그룹’ 사건이 ‘국가 전복 음모’ 사건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3당’ 사건은 김일성과 내부 그룹이 주도한 반종파 투쟁이 당시 북한의 정치 지형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주변 세력’ 및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을 의미한다.

9월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개조를 앞당기기 위한 전 인민적 차원의 ‘천리마 운동’을 결정한 직후 당 중앙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내의 ‘제3세력’에 대한 제거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천리마 운동’이라는 사회주의로의 급속한 개조 노선의 실천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상적·조직적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김일성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 형성을 위한 마지막 작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11월에 당 중앙은 소부르주아 지하당 건설과 북한에 자본주의 제도 부활 및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국가 전복을 기도한 ‘제3당 사건’을 폭로하였다.<sup>74)</sup> 조국평화통일촉진위원회 구성원이 주도하고 청우당 및 민주당이 연루된 이 사건은 박현영·이승엽 사건에서부터 ‘최창익 그룹’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된 1950년대 북한 ‘종파 사건’의 ‘최종판’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청우당의 경우, 해방 직후부터 지주 및 자본가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적 시도를 비롯하여 한국전쟁 시기에 이승엽 등과 결탁하여 일명 ‘비상조치 집행위원회’를 통해 로동당 파괴 활동 및 정권 획득을 위한 봉기 조직 활동을 벌였으며, 김달현, 김원봉 등 청우당 상층 지도부는 이승만 정권과 통일정부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이다. 1956년에는 ‘최창익 그룹’ 등과 반정부 정변 실현을 공동으로 음모하고, 형가리 사태 직후 김원봉은 김달현에게 개별 지역 단위의 인민 봉기를 위한 조건 조성을 시

---

74) АВПРФ, ф.0102, оп.14, п.75, д.9, pp. 53~60 참조

시하였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한으로의 도피를 계획했다는 것이 조사 내용에 포함되었다. 청우당에 대한 조사는 1959년 3월까지 진행되어 김달현, 홍기환 등을 비롯한 지도부 대부분이 체포되어 최고인민회의 및 국가 기관에서의 직위 박탈 등의 처벌을 받았다.

조국평화통일촉진위원회의 ‘음모’ 또한 청우당의 경우와 유사하나 ‘제3당’ 사건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내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남쪽으로부터의 대표’임을 자임하면서 당 정책에 균열을 가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본주의 제도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 반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미 정보 기관에 의해 ‘국제 스파이’로 인식된 엄항섭을 포함하여 조소앙, 김약수, 원세훈, 최동오 등에 의해 지도된 ‘평화통일위원회’는 청우당과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미국의 지시’ 하에 이들을 조직하고 ‘최창의 그룹’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일명 ‘통일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수상에 조소앙, 부수상에 김달현을 내정하고 향후 통일 정부하에서의 의석 배분 문제도 구체적으로 토의한 사실이 폭로되었다.<sup>75)</sup>

상층 정치 차원에서 ‘최창의 그룹’ 및 ‘제3당’ 등의 ‘국가 전복 음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도시, 농촌, 산업 분야별로 전 사회적 차원의 ‘반동 문자 및 적대 문자’에 대한 색출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1958년 10월부터 1959년 3월까지 6만 명의 범죄자가 색출되었고 이외에 ‘체제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적대 문자로 1만 명 이상이 체포되었는데, 이 중에는 약 2,000명의 간첩 활동자가 포함되었다. ‘반동 적대 문자’ 색출을 위한 대대적인 대중 사업은 1959년 3월경에 사실상 종결되었다.<sup>76)</sup>

75)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항섭 등은 자살을 시도하였고, 조소昂은 물에 투신 자살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협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최승희의 남편 안막(전 문화부상) 또한 이 사건과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고, 최승희 또한 이에 준하였다.

1959년 6월 전원회의에서 ‘반당 종파 그룹’ 사건과 관련하여 당 중앙위원들이 추가로 축출되었으며,<sup>77)</sup> 1956년 말부터 전 당 및 국가 기관에서 진행된 ‘최창익 그룹’ 등을 포함한 ‘반당 음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은 1959년 10월경 심리가 사실상 종결되었다.<sup>78)</sup> 이로써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에 대항하거나 견제할 만한 정치 분파나 사회 세력이 일소되고 권력 분배 및 교체를 위한 ‘당내 경쟁’ 가능성마저 사라져 북한 정치에서의 역동성(dynamics of politics)이 약화되었으며, 김일성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일당제하에서 ‘대면 투쟁’의 양상을 띤 북한의 당내 권력 갈등을 ‘당내 경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당내 경쟁으로서의 권

76) АВПРФ, ф.0102, оп.15, п.81, д.8, pp. 120~121 참조

77) ‘반당 종파 사건’과 관련하여 6월 전원회의에서 축출된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위원> 현정민(전 함남 도당위원장), 리유민(전 함남 인민위원장), 허성택(전 석탄산업상), 조영(전 도당위원장), 허빈(전 폴란드 대사), 진방수(전 상업상), 리권무(전 인민군 총참모장), 최종학(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원봉(당 중앙위건설 수송부장, 전 강원 도당위원장), 리상혁(전 부상) 등. <후보위원> 정영표(전 평양시 인민위원장), 허국봉(전 외무부상), 조훈(전 경공업부상), 오상진(전 농업부상) 등. АВПРФ, ф.0102, оп.15, п.81, д.8, pp. 211~214 참조

78) ‘최창익 그룹’ 사건 관련자들은 관련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제1그룹에는 일부 군 관련자를 포함하여 최창익, 박창옥, 김봉술(전 민족보위부상) 등 각 분파의지도자들 20~30명이 해당되었으며, 이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예정되었다. 심리 결과, 박창옥과 최창익은 당시 김일성이 겸임하고 있던 당 중앙위원장과 내각 수상직에 각각 내정되어 있었다고 발표되었다. АВПРФ, ф.0102, оп.15, п.81, д.9, pp. 58~59 참조

력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단위로서 기존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당내 권력 갈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 오던 ‘종파’나 ‘파벌’이라는 용어에 주목하고, 이 용어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내 갈등이나 경쟁을 분석하는 객관적인 분석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치 평가적 의미’를 탈각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종파’나 ‘파벌’이라는 가치 평가적 개념보다 서구 정당 체계 분석에서 사용되는 ‘분파’(fraction)라는, ‘파벌’이나 ‘종파’보다 좀더 중립적이고 가치 구속적이지 않은 용어를 분석 도구로 선택할 것을 제기하였다.

단일 정당 체계에서의 당내 권력 갈등을 당내 경쟁이라는 정상적인 정치 과정의 차원으로 인정한다면 ‘분파’는 당내 구조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북한의 공식 문건에서 표현되고 있는 ‘종파’라는 용어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가치 평가적인 용어이자 ‘경쟁 승리자의 용어’이므로 관련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객관성을 지니기 어려운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56년 8월에 발생한 북한로동당 내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는 다른 말인 ‘8월 종파 사건’과 필자가 사용하는 ‘8월 전원회의 사건’ 간의 차이는 용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여주려 하였다. 전자가 가치 평가적인 용어라면 후자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권력 갈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전후 경제 복구 건설 노선 수립을 둘러싼 대내외적 논쟁과 대립이 북한 지도부의 권력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가정은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갈등’의 직접적 계기는 ‘이론’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발견된다. 즉 ‘계획’의 ‘수립’ 과정이 아니라 ‘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의 상승 작용 결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위기가 야기되었고, 이 위기의 대응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 내의 권력 갈등이 표면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패권(supremacy)을 위한 능동적인 진군이었다기보다는,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과정에서 일련의 정책적 오류가 발생하여 이것이 정책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과 그 내부 그룹이 기존의 우월적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상황적 대처가 김일성과 내부 그룹의 정치적 존폐를 결정하는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비화되어 이후 ‘최창의 반당 간첩 음모 사건’ 및 ‘제3당 사건’으로 확대, 전화되는 패권 장악 추진(drive for supremacy)으로 발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 내의 정책적 오류와 실패에 대한 심각한 상황 인식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급기야 이를 둘러싼 지도부 내의 갈등이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갈등의 표출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서 중국과 특히 소련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4~1955년의 정책 실패로 인해 초래된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그에 따른 지도부 내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1955년 후반기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 간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지도부 내의 갈등 등 당시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양국간에는 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당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김일성 내부 그룹은 대대적인 숙청이나 패권적 지위 획득 등의 파국적이고 무리한 해결 방식을 동원할 수 없었으며, 소련과 중국의 정치적 견제를 무시한 채 내부적으로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 전술의 경우의 수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대내적으로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의 고조와 대외적으로 이에 대한 소련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직면한 1955년의 상황은 북한 지도부에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김일성과 내부 그룹은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정치적 선택에 대한 중압이나 압박감이 여타 정치 분파에 비해 한층 더 높은 것이었다. 김일성의 정치적 선택은 ‘책임론’을 통한 정국 돌파와 이를 통한 각 분파 내에서의 기존의 안정적인 지위 확인이었다.

정전 이후(박헌영 사건 이후) 당내에 존재한 4개 분파(소련 국적 조선인, 옌안 출신, 남로당 계열, 국내 토착 공산주의자)는 노선이나 이념적 스펙트럼상에 좌우로 정렬 배치되는 차별성을 지닌 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가 보다는 ‘출신’이 지니는 공통된 정서나 경험, 또는 당내의 주변적 이해 관계를 토대로 한 비교적 정치적으로 느슨한 결합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김일성만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 복구 및 건설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적 오류에 대한 책임론이 등장함에 따라 사태의 추이는 분파간의 균형 문제를 넘어서 하위 권력 자원 분배로부터 최고 권력의 분점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내 경쟁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인지도 체제의 문제가 당내 갈등의 표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직위 이양 문제는 김일성에게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험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분파 간의 ‘경쟁’은 본격적인 ‘대면 투쟁’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1955년 말에서 1956년 초에 발생한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는 김일성의 당내 경쟁에 대한 조정 방식이 간부 인사를 통한 하위 권력 배분이나 1955년 전반기에 행해졌던 각 분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넘어서 각 분파 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권력 박탈이라는, 당내 경쟁의 정치적 기반과 기회의 박탈 형태로 급전되었다는 점이다. 1956년 1월 상무위원회에서 내린 박창옥에 대한 책벌 내용에서 보여지듯이 당내 경쟁의 초점은 이미 최고 권력 획득의 문제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김일성 및 그 내부 그룹과 옌안계 및 소련계가 당내 최고 권력을 목표로 한 쌍방간의 전면적인 ‘대면 투쟁’에 돌입한 것이 1956

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이다.

1956년 10월 형가리 사태가 발생하여 국제 공산 진영이 분열하고 1957년부터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함에 따라 김일성은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소련과 중국, 그 중에서도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소련과 주도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동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따라서 중국은 1956년 9월 북한에 대한 정치적 개입 이후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957년 11월 마오쩌둥은 모스크바 방문시에 김일성에게 전격적인 화해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김일성과 내부 그룹에게 있어서 여타 분파에 대한 제거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종파 투쟁’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흐루시초프도 김일성과의 대담에서 김일성이 지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중국과 소련 지도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8월 전원회의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결과적으로 보증해 주고 김일성의 정책 노선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1957년에 들어서면서 사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반전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특히,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한 역할은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 ‘8월 전원회의 사건’이 발전된 ‘최창익 그룹’ 사건은 ‘제3당’ 사건과 연결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직위 불만’이라는 ‘당내 갈등’의 문제로부터 이승만 정권 및 미국과 연결된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한 ‘간첩 사건’으로 비화된다. ‘당내 경쟁’으로부터 ‘체제 전복’으로 문제 가 확대, 변질되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권력 유지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였던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권력 갈등 과정에서 김일성이 승리하고 절대 권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당시 김일성은 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대다수 중앙위원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인민들의 입장에서도 김일성을 대신할 리더십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하였다. 이는 지도부의 경제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이 김일성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1956년 9월,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비공식 방문한 소련과 중국 대표단은 김일성에 대한 북한로동당 중앙위와 인민 대중들의 지지도를 확인하고 김일성을 축출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철회하였던 것이다.

둘째, 김일성과 내부 그룹을 제외한 분파들(옌안계, 소련계)이 인민 대중 속에 조직적으로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거의 활동 공간이나 경험이 갖는 한계로 인해 대중과 융화되기 어려웠다. 특히 소련계의 경우는 그들의 특권 의식으로 인해 인민 대중은 물론 중하위 계 관료들 사이에서 심한 거부감이 조성된 상태였다. 또한 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이미 잘 알려진 김일성의 정력적인 현장 지도는 대중에 대한 지지 획득이라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경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력 자원은 국내로부터가 아닌 ‘외부적’ 영향력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계획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활용한 투쟁이나 대중 시위 방식은 애초에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57년 6월 소련공산당 내에서 발생한 몰로토프 등이 연루된 ‘반당 종파 사건’은 흐루시초프로 하여금 당 제1서기와 수상직 겸임이라는 권력 집중을 달성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집중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

넷째,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 이후 축발된 사회주의 진영 내의 정치적 불일치로 인해 김일성에게는 소련 및 중국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정책 수립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57년 11월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1956년 9월 북한에 대한 정치

적 개입이 옳지 못한 정책이었음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정치적 개입에 대한 사과를 한 배경에는 당시 소련과의 이념적 갈등 과정에서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김일성은 바로 이 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다섯째, 당시 북한 사회 내에 김일성과 그 정치 세력에 대항할 만한 사회 및 정치적 대체 세력이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북조선 민주당이나 청우당과 같은 기존의 정치 세력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약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또한 1956년 형가리 사태에 대해 당시 김일성이 평가하였듯이 1950년대 북한 시민 사회의 미성숙—김일성은 이를 조직화된 인텔리겐치아의 부재로 표현—은 정치 사회 수준의 저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토대적 기반의 부재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전쟁 후 북한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저항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상층 정치 차원의 권력 갈등으로 협약화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1950년대 북한의 권력 갈등 결과 북한에서는 1994년 김일성 사망시까지 지속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게 되는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8~10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 : 1953년도(전원회의, 정치·상무·조직위

원회)』(1953).  
-----, 『결정집 : 1954년도(전원회의, 정치·상무·조직위원회)』(1954).  
-----, 『결정집 : 1955년도(전원회의, 정치·상무·조직위원회)』(1955).  
-----, 『결정집 : 1956년도(전원회의, 정치·상무·조직위원회)』(1956).  
АВПРФ(러시아연방 외무성 대외정책문서), ф.0102, оп.10, п.52, д.8.  
АВПРФ, ф.0102, оп.10, п.57, д.49.  
АВПРФ, ф.0102, оп.10, п.53, д.22.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6.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7.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8.  
АВПРФ, ф.0102, оп.11, п.60, д.9.  
АВПРФ, ф.0102, оп.11, п.65, д.45.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д.4.  
АВПРФ, ф.0102, оп.12, п.68, д.6.  
АВПРФ, ф.0102, оп.13, п.72, д.6.  
АВПРФ, ф.0102, оп.14, п.75, д.8.  
АВПРФ, ф.0102, оп.14, п.75, д.9.  
АВПРФ, ф.0102, оп.15, п.81, д.8.  
АВПРФ, ф.0102, оп.15, п.81, д.9.

## <2차 자료>

G. 사르토리, 어수영 역, 『현대정당론』(서울 : 동녘, 1986).  
드미트리 안토노비치 불코고노프, 김일환 외 역, 『크렘린의 수령들』, 상권  
(서울 : 한송, 1996).  
박길용, 『김일성 외교비사』(서울 : 중앙일보사, 1994).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서울 : 경남대 국동문

제연구소, 1991).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 역사비평사, 1998).

이재선, 『중화인민공화국』(서울 : 학민사, 1988).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1995).

편집부 편, 『중소 대립과 북한』(서울 : 나라사랑, 1988).

A. N. Lankov, *Severnaya, Koreya : vchera ii segodnya*(Moscow, 1995).

Chong-Sik Lee, *Korean Workers' Party : a short history*(Princeton :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Koon-Woo Nam, *The North Korean Communist Leadership 1945 ~ 1965 : A Study of Factionalism and Political Consolidation*(Tuscaloosa : Univ. of Alabama Press, 1974).

Robert A. Scalapino,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 The Movement*(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72).

(Abstract)

## North Korea's Political Changes and Power Realignment in the 1950s following the Korean War Armistice

Baek Jun Kee(Hanshin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This article focuses on North Korea in the 1950s following the Korean War when the basic framework and political mechanism of the current North Korean socialist regime were formula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 how the political actors of high politics in the North recognized the realistic problems facing them at that time ; how resolving problems evolved and erupted political rivalry and conflicts ; why political conflicts went through such a 'catastrophic, disastrous coordination' to become the current noncompetitive, closed political mechanism ; and what implications the defeated political forces have in the political history of North Korea. Most researchers agree that the 1950s in North Korea meant a period of great potentials that provided the North with various possible ways of shifting its government. The period also represented an era of abundance in a political sense.

The post-Korean War period ha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regime : First, the political elite groups and political factions outside of the inner circle led by Kim Il Sung were finally excluded from the central power circle in the power struggles that ensued in high-level politics in 1953 to 1956. The political dynamics have since disappeared in the North. In the wake of the massive cleanup campaign, 1957-1959, the realignment of the political terrain which began in high-level politics spread to low-level politics and then to the whole society, resulting in the oneness of a single leader led by Kim Il Sung.

Second, in social and economic terms, full-fledged and widespread fundamental socialist reconstruction occurred among the citizens and industrial fields, providing a basic framework for the current North Korean-style socialist economic system.

Third, a foundation for an independent diplomatic line was laid down in the 1950s, that is, the engagement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the North's power struggle in 1956 failed and the socialist camp fell apart. Consequently, this aided in paving the way for an independent diplomatic line for North Korea.

Fourth, the North, after post-war restoration, economic recovery, and the completion of a socialist system through three-and five-year development plans, established a reunification strategy based on its 'economic superiority.'<sup>1</sup> It attempted to ease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attain a stat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putting forward a series of proposals, including the confederation proposal. This proposal suggested commodities and resource assistance toward the South and free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These attempts in the area of unification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onstitute a prototype of the North's institutional approach toward unification.

This study notes tha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basically caused changes in other arenas. The 1956 political crisis, represented by the 'August plenary session,' took center stage in the political changes in North Korea. This paper analyses points of disputes and standpoints with respect to the political changes in the North, which were destined to define the North's political picture for the following 40 years.

The article also explores the causes of the 1956 political crisis, which represents a culmination of the political changes, in terms of economic restoration following the wa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ensuing social and political crises. Finally, through the so-called 'Choi Chang Ik's anti-party conspiracy and spy incident' and 'the third-party incid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in which the power struggles at the heart of high-level politics featured in the 1956 'August plenary session' expanded toward national organs and society as a whole, contributing to the realignment of power i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North Korea.

Key Words : North Korea, Political Change, Power Realignment